

월간

나라 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 Vol. 23 / Nov. 2018

11

재정 인사이드

재정칼럼

중앙-지방 간 세출기능 재조정 방향

전략적 자원배분 방향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툼아보기

2018년 자원배분 구조

재정과 정보

이슈포커스

프랑스 국가지분관리기구(APE)의 주요역할과 시사점

e나라재산시스템을 활용한 공간정보 기반의

효율적 국유재산관리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준비

Photo Essay
포토에세이



철저한 준비 따뜻한 미래를 위한 발판

11월이 되면 입동 준비로 바빠집니다.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집안 곳곳을 정비하고 김장을 합니다.

철저한 준비는 따뜻한 미래를 나기 위한 발판이 되니까요.

준비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에 관한 각종 정보를 모아 우리나라 예산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게 돕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재정정보원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NOVEMBER
2018 Vol. 23

재정 인사이트

06 재정칼럼

중앙-지방 간 세출기능 재조정 방향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략적 자원배분 방향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유승원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5 톨아보기

2018년 자원배분 구조

재정과 정보

20 이슈포커스

프랑스 국가지분관리기구(APE)의 주요역할과 시사점
e나라재산시스템을 활용한 공간정보 기반의
효율적 국유재산관리

34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월간 재정통계

테마통계: 일반·지방행정 분야

46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아시안게임

50 해외재정동향

OECD 공공데이터 개방보고서 주요 내용

58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⑪

아우토반 건설로 실업문제가 해결됐을까?

62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재정 인사이트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재정 이야기
다양한 재정정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이 가치 있는 정보를 전합니다



재정칼럼

중앙-지방 간 세출기능 재조정 방향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략적 자원배분 방향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유승원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툼아보기

2018년 자원배분 구조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jhkim@seoultech.ac.kr

중앙-지방 간 세출기능 재조정 방향



PUBLIC FINANCE COLUMN

1. 최근의 전개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의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 및 자원배분이 집권화되어 있다는 판단으로, 연방제 국가에서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정부가 상당 부분의 정부 기능을 수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 자원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2017년 11월부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76:24에서 70:30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를 구성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동 위원회가 격렬한 논의 끝에 내어 놓은 대안은 정부 내 논의를 거쳐서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하고 2022년까지는 추가적인 국세 이양을 통하여 70:30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2018년 10월 31일에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에 3.5조 원에 해당하는 국가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그 대상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사업들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였다.

2. 정부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기능의 재조정 시각에서 볼 때 보완해야 할 점이 보인다. 이러한 작업은 본래 국가가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기능을 몇 가지 이론적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작업 없이 약 5조 원에 달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가운데 일부 사업들을 대상으로 이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그 사업들이 지방적 성격을 지닌다는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우선 지역자율계정사업에 대한 이양은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이양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능이 일련의 사무의 집합이라고 본다면, 기능이양은 대규모적인 사무이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재 해당 계정에 있는 사업들을 이양하는 것은 사무이양이라고 보기 어렵다. 각 부처로 하여금 여전히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령상 해당 사무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유지되는 한, 언제든지 해당 부처는 유사한 신규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능이양의 본래적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양대상사업의 근거 법령 규정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가 표방한 연방제 수준의 분권과는 매우 큰 괴리를 보일 뿐만 아니라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을 포함한 합리적인 기능재조정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기능재조정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이동가능성, 외부효과, 규모의 경제, 포획 가능성, 서비스 전달비용, 수행능력 등 이미 존재하는 이론적 기준들을 활용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들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하였던 지역성이 매우 강한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이 수행하는 기능의 지방이양이나, 현재 국가와 지방이 분담하고 있는 복지 관련 세부기능의 재조정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짧은 기간 동안에 대안을 추구하다 보니, 기능재조정을 위한 적절한 기구를 설립하고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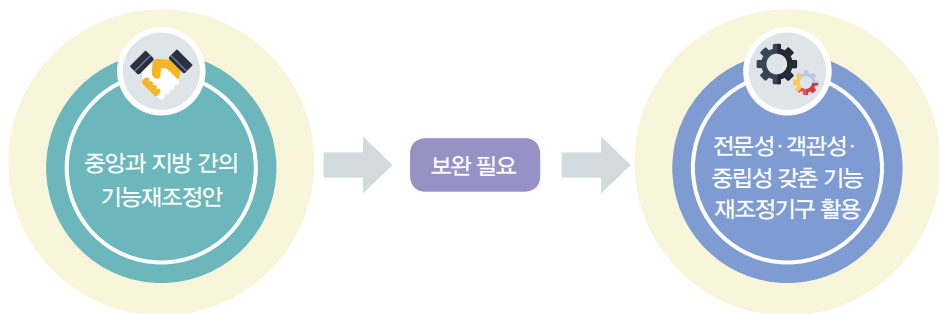
3. 방향

이번에 발표된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재조정안은 체계적이고 임시방편적이 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이번 안과는 별도로 중장기적 시각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재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능재조정은 권한, 조직 및 재원의 이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관련 부처도 참여한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의 대안에 대해서 최종결론을 내리기까지 중앙정부 내에서만도 무려 10개월 동안 논의하였다는 점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한다. 또한, 기능수행의 주체 변경으로 정부 내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정부 밖의 이해당사자들도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기능재조정안 나아갈 방향



정부 내외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객관성 및 중립성을 갖춘 기능재조정기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관련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시도와 시군구 간 이해의 상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도와 시군구의 대표를 반드시 구분해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가 팽팽히 맞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참여해야 하며, 전문가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중립성이다. 기존의 분권 관련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의 편을 드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그 논의 결과가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좌초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광**

전략적 자원배분 방향



우리 재정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재정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가용 재원의 증가폭을 상당 정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민주화 이후 속속 도입된 복지 프로그램이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 상당한 지출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여력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재정여력 확보의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하나 세금 부담 증가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세금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 증가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출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민들이 정부가 하는 일과 일을 수행하는 방식에서 낭비와 비효율이 없다고 믿을 때에만 세금 부담 증가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지출구조혁신 혹은 지출의 효율화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개별사업 위주로 비효율을 없애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이 특징이다. 사후적 성과관리방식으로 도입된 재정사업자율평가, 국고보조사업평가, 관문

형 재정관리제도로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공통된 특징은 단위사업 혹은 세부사업 위주로 효율성을 판단한다는 점이다. 개별사업이 비효율적이면 전체 사업이 효율적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개별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 그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개별사업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전체 재정운용이 효율화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개별사업은 효율적이지만, 지출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지출의 구성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전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출구조혁신의 방안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과 지출의 전략적 구성, 칸막이 없는 재정운용, 그리고 전략적 지출검토의 제도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먼저, 지출 프로그램의 조합과 구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의 정책연구는 이른바 정책조합(policy mix)을 강조하고 있다. 예산은 본질적으로 정책의 화폐적 표현이므로, 적절한 정책조합이란 곧 지출의 적절한 조합을 의미한다. 큰 틀에서 정책의 구성과 상호보완성을 고민하지 않을 경우 개별정책 혹은 개별지출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정책목표를 추구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떤 정책목표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개별정책에서 경쟁력 확보, 지역균형 발전, 저소득층 보호라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추구함으로써 단 하나의 정책목표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때, 개별정책보다는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조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인 정부에서는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목표 모두를 개별지출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할 경우 정책의 효과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위험부담을 지닌 도전적 투자가 필요한데, 위험감수(risk-taking)를 위해서는 투자와 도전에 실패할 경우에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이 된다. 그런데 개별정책에서 경쟁력 추구하고 투자의 효율성이라는 정책목표와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경우, 그 어떤 정책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우리나라 대학재정지원사업은 항상 보호학문 지원, 지방대 육성, 세계적 경쟁력 확보라는 상이한 목표들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목표를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개별재정지원사업에서 복합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목표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지출 프로그램 전체가 상호보완성을 갖도록 설계하는 동시에 개별지출 프로그램에서는 목표설정을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향후 지출구조혁신은 개별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서 벗어나 지출 프로그램의 구성과 전체



적인 효율성·효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지출구조혁신의 두 번째 방향은 칸막이 없는 재정운용으로의 전환이다.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포괄적인(comprehensive) 재정운용이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이른바 봉토현상(fiefdom) 없는 재정운용을 의미한다.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의 방향과 규모를 정할 수 있어야만 배분적 효율성과 지출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나 많은 봉토가 존재하며, 지출 간 경계가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개에 달하는 특별회계, 67개에 달하는 기금이다. 모든 특별회계와 기금은 설치 당시 뚜렷한 근거가 있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립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다른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재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어 있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특히, 이 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되어 있긴 하지만 지원 대상을 초·중·고교생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급감하고 있는 학령인구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영유아 교육과 보육, 고등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사용될 수 없다. 몇 년 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감 관할 밖에 있는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한 적이 있었지만, 교육감 등의 반발에 부딪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바 있다. 누리과정 예산지원의 실패는 예산운용의 단위인 프로그램의 경계와 권한과 책임의 단위인 조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예산의 상호 융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향후 거버넌스의 변화까지 고려하여, 교육을 둘러싼 경계의 해소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출구조혁신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른바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서 기획재정부가 전략적 지출검토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략적 지출검토는 개별사업으로부터 벗어나 분야와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지출의 구성과 우선순위 설정을 재검토하는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 거시적·전략적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출구조조정이라는 성과를 조금하게 내기 위해 전략적 지출검토에 대해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출검토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기존에 도입·운영되고 있던 다른 성과관리 수단들과의 전략적 구조조정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남광**



유승원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swonyu@naver.com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정부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쓰고 있다고 말한다. 거의 매년 비슷한 얘기를 듣는 것 같다. 그런데 여유재원이란? 정부의 마른 수건 얘기가 사실이라면 여유재원이 없어야 정상인데 여기서 여유재원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 보인다. 어찌된 것일까?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회성 여유재원은 있을 수 있지만 여유재원이 몇 년에 걸쳐 생기진 않을 것이다. 정부가 마른 수건도 쥐어짜니깐. 설사 여유재원이 몇 년에 걸쳐 생긴다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 세금을 깎아주거나 해당 여유재원으로 중요한 국가사업에 쓰면 될 것이다. 즉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얘기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여유재원이 생기더라도 활용방안은 특별한 고민 없이 마련할 수 있어 보인다. 그런데도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얘기한다면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여유재원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여유재원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유재원은 무엇이고 누가 만들어낸 용어인가? 「국가재정법」에서 이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런데 법에서 이 용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법 조항¹을 보니 각 특별회계와 기금

이 사용하고 남은 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알겠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사항이 있다.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남는 돈이 있다고?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상대적으로 수입은 꽤 들어오는데 지출은 얼마 안 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이 있다는 말이 된다. 특별회계는 실제로 남는 돈이 거의 없어서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기금의 여유재원이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기금의 지출을 초과하는 수입, 즉 기금의 여유재원은 약 225조 원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으로 200조 원을 넘는다². 이게 정부가 말하는 여유재원의 실체이다. 지출이 수입보다 작거나, 지출 규모보다 더 징수하는 수입이 여유재원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기금은 일반적인 사업이 아닌 말 그대로 특정한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재정의 지갑·주머니(account)이다. 그런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지출규모가 얼마 안 되면서도 기금이 많이 설치되면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 2018년 현재 정부가 운용 중인 기금은 67개이다. 각 기금이 평균 8조 8,878억 원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금 중 운용 규모가 1조 원도 안 되는 것이 34개를 차지한다. 초소형 기금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양한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기금을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정치권의 요구를 막아내지 못해 정부가 기금을 남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³.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자. 만들어진 기금은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성실히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쓸 만한 사업이 많지 않아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과거 기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달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그때는 신통치 않은 사업도 상대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사실상 동일하게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감사원도 현미경을 들이보고 있다. 그러니 기금이 돈이 남იდ더라도 수준이 낮은 사업에 돈을 쓸 수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정부재정에서의 여유재원, 정확히 기금의 여유재원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가장 단순하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기금의 지출 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입 규모를 줄여 여유재원을 감소시



1.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본 글에서 인용한 수치는 정부의 나라살림 예산개요, e-나라지표, 열린재정 홈페이지(<http://www.openfiscaldata.go.kr>)에서 추출하였다.

3. 참고로 운용 규모가 100억 원이 안 되는 기금도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다. 정부가 얼마 전 이 기금을 유사한 언론진흥기금이 기금도 2018년 운용 규모가 331억 원에 불과한 초소형 기금이다)에 통합시키려 하였으나 정치권과 지역신문의 반발로 지금처럼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



Improve Efficiency

키는 것이다. 각 기금이 거두는 수수료나 보험료 등을 대폭 인하 또는 감면해 주자. 기금의 지출 규모가 줄지 않기 때문에 기금이 지금처럼 목적에 부합하게 지속적으로 운용된다. 거기에 더해 인하 또는 감면으로 국민과 사업자가 추가로 만족해 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복잡하고 어렵지만 성공하면 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방법이 있다. 67개 기금과 각 기금의 수입, 지출 구조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통폐합되는 기금이 나올 것이다. 존치하는 기금도 수입과 지출이 대폭 변화될 수 있다. 가칭 「정부기금개편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엄선하고 위원회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한 후 조금만 기다려보자.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전보다 기금의 성과가 제고될 것이다. 여유재원 활용방안도 마련될 것이다. 그 돈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하거나⁴ 일반회계 등 국민을 위해 쓸 곳은 많지만 재원이 부족한 곳에 기금을 추가로 지원할⁵ 수도 있다.

누군가 그냥 지금처럼 기금의 여유재원을 금융기관에 맡겨서 운용수익을 얻자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금융기관이 높은 운용수익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고, 그 수익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가 금융계에서 곧잘 흘러나온다. 위에서 말한 대안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기금의 수수료 등을 깎아주거나 「정부기금개편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나라 재원



⁴ 국가채무가 2008년 309조 원에서 2017년 660조 원으로 2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⁵ 기금은 2018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여타 기금에 200조 원 이상의 돈을 지원(정부 내부거래)하였다.



※ 툭아보다: 살살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2018년 자원배분 구조

■ 중앙정부의 지방이전 자원 현황

2018년 본예산 기준 통합재정 지출(중앙 및 지방)은 555.3조 원이고 지방재정은 276.1조 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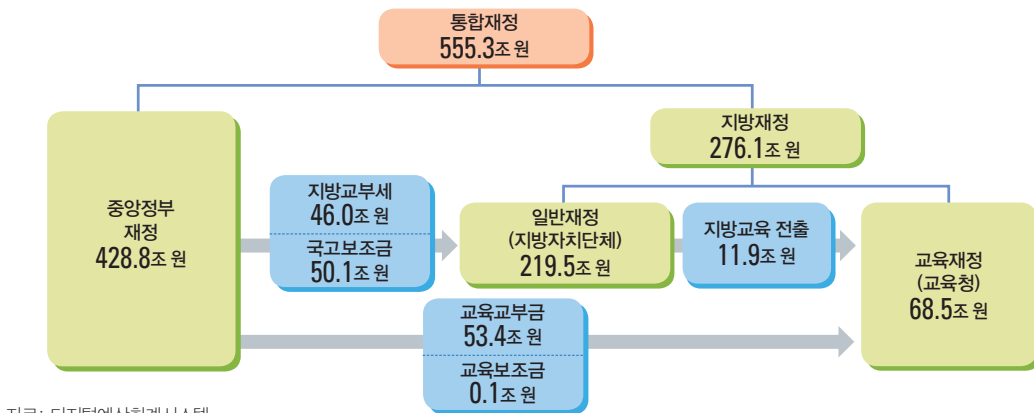
• 지방이전 자원은 지방교부세 46.0조 원, 교육교부금 53.4조 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5조 원 및 유아교육특별회계* 3.9조 원), 국고보조금 50.2조 원으로 구성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17년 설치되었으며 2019년 일몰 예정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뱃값 개별소비세의 20%로 자원 구성

•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으로 구성

중앙-지방 재정구조(2018년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중앙정부의 지방이전 자원규모는 2012년 이후 연평균 6.0%로 증가

• 2012년부터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5.7%, 교육교부금은 5.6%,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6.6%로 증가

중앙-지방 이전 자원 추이

(단위: 조 원,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지방교부세 (총지출 대비 비중)	33.0 (10.2)	35.5 (10.4)	35.7 (10.0)	34.9 (9.3)	36.1 (9.4)	40.7 (10.2)	46.0 (10.7)	5.7
교육교부금	38.4 (11.8)	41.1 (12.0)	40.9 (11.5)	39.4 (10.5)	41.2 (10.7)	46.9 (11.7)	53.4 (12.5)	5.6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34.2 (10.5)	36.8 (10.7)	40.0 (11.2)	45.1 (12.0)	46.0 (11.9)	46.4 (11.6)	50.2 (11.7)	6.6
교육교부금	105.7 (32.5)	113.4 (33.1)	116.6 (32.8)	119.4 (31.8)	123.4 (31.9)	134.1 (33.5)	149.6 (34.9)	6.0
중앙정부 총지출	325.4 (100.0)	342.0 (100.0)	355.8 (100.0)	375.4 (100.0)	386.4 (100.0)	400.5 (100.0)	428.8 (100.0)	4.7

주 1) 2015년 이전 특별회계 교부사업 포함(이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2)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포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회계결산보고서



■ 분야별 자원배분

2018년 본예산 기준 보건·복지·고용(144.6조 원, 33.4%) 분야에 가장 많은 자원이 배분되어 있음

-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2012년 이후 연평균 7.7%로 자원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자원 배분 비중 역시 증가
- SOC 분야는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증가율 -3.2%를 기록
-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규모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증가 폭이 크지 않아 총지출 대비 비중은 감소

12대 분야 자원배분 추이(추경기준)

(단위: 조 원,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보건·복지·고용	92.6 (28.5)	99.3 (28.5)	106.4 (29.9)	120.4 (31.3)	126.9 (31.8)	131.9 (32.2)	144.6 (33.4)	7.7
교육	45.5 (14)	49.9 (14.3)	50.7 (14.2)	52.9 (13.8)	55.1 (13.8)	59.4 (14.5)	64.2 (14.8)	5.9
문화·체육·관광	4.6 (1.4)	5.1 (1.5)	5.4 (1.5)	6.4 (1.7)	6.9 (1.7)	7 (1.7)	6.5 (1.5)	5.9
R&D	16 (4.9)	17.1 (4.9)	17.7 (5.0)	18.9 (4.9)	19.1 (4.8)	19.5 (4.8)	19.7 (4.6)	3.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4.6)	16.7 (4.8)	15.4 (4.3)	18.1 (4.7)	18.6 (4.7)	18.8 (4.6)	16.3 (3.8)	1.3
SOC	23.1 (7.1)	25 (7.2)	23.7 (6.7)	26.1 (6.8)	23.7 (5.9)	22.2 (5.4)	19.0 (4.4)	-3.2
농림·수산·식품	18.1 (5.6)	18.9 (5.4)	18.7 (5.3)	19.8 (5.1)	19.6 (4.9)	19.8 (4.8)	19.7 (4.6)	1.4
환경	6 (1.8)	6.5 (1.9)	6.5 (1.8)	6.9 (1.8)	7 (1.8)	7.1 (1.7)	6.9 (1.6)	2.4
국방	33 (10.1)	34.5 (9.9)	35.7 (10.0)	37.6 (9.8)	38.8 (9.7)	40.3 (9.8)	43.2 (10.0)	4.6
외교·통일	3.9 (1.2)	4.1 (1.2)	4.2 (1.2)	4.5 (1.2)	4.7 (1.2)	4.6 (1.1)	4.7 (1.1)	3.2
공공질서·안전	14.5 (4.5)	15.2 (4.4)	15.8 (4.4)	17.1 (4.4)	17.5 (4.4)	18.2 (4.4)	19.1 (4.4)	4.7
일반·지방행정	55.1 (16.9)	56.2 (16.1)	57.2 (16.1)	58.2 (15.1)	62.9 (15.8)	65.1 (15.9)	69.0 (15.9)	3.8
합계	325.4 (100.0)	349 (100.0)	355.8 (100.0)	384.7 (100.0)	398.5 (100.0)	410.1 (100.0)	432.7 (100.0)	4.9

주: 2012년 및 2014년은 본예산 기준이며, 괄호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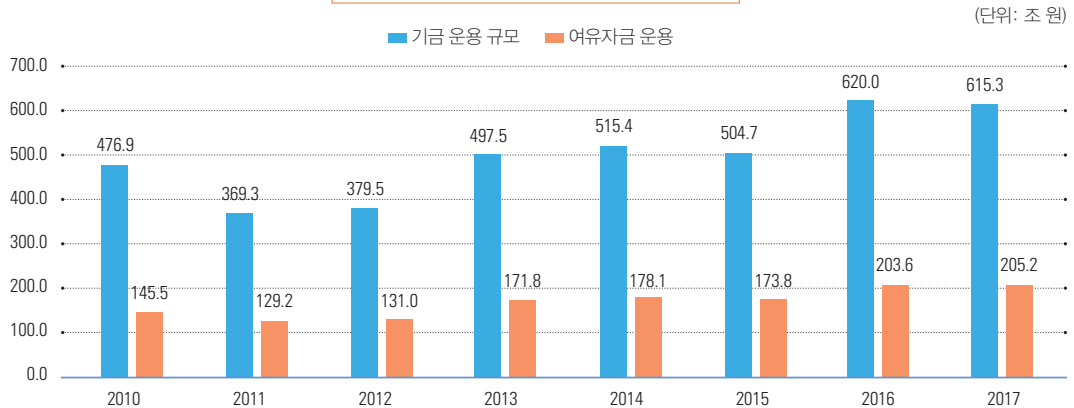
■기금의 여유재원 운용

기금의 여유자금은 2015년부터 증가 추세

•기금 운용 규모는 2010년 476.9조 원에서 2017년 615.3조 원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와 함께 여유자금 운용 규모도 145.5조 원에서 205.2조 원으로 확대

* 여유자금은 특정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 기금의 고유사업에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을 의미

기금 운용 규모 및 여유자금 운용 규모의 추이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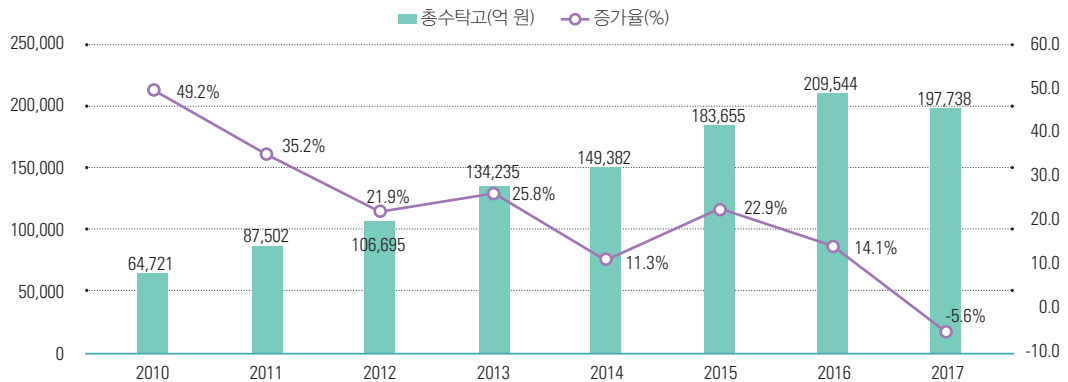
•2001년 도입된 연기금 투자물은 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자산 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수탁규모는 증가 추세

– 연기금 투자물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전문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며 자금 예탁 여부, 예탁규모 등은 각 기금관리 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함*

*연기금 투자물 예치비중은 2015년 3.1%, 2016년 3.1%에서 2017년 2.7%로 감소

– 2017년 총수탁고는 19.8조 원으로 2010년 6.5조 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연기금 투자물 수탁규모



자료: 기획재정부(연기금 투자물 집합투자기금평가회사)

재정과 정보



통합화, 표준화, 정보화를 통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신뢰성 있는 재정 통계로
투명한 국가재정 운용을 지원합니다



이슈포커스

프랑스 국가지분관리기구(APE)의 주요역할과 시사점

e나라재산시스템을 활용한 공간정보 기반의 효율적 국유재산관리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월간 재정통계

테마통계: 일반·지방행정 분야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아시안게임

해외재정동향

OECD 공공데이터 개방보고서 주요 내용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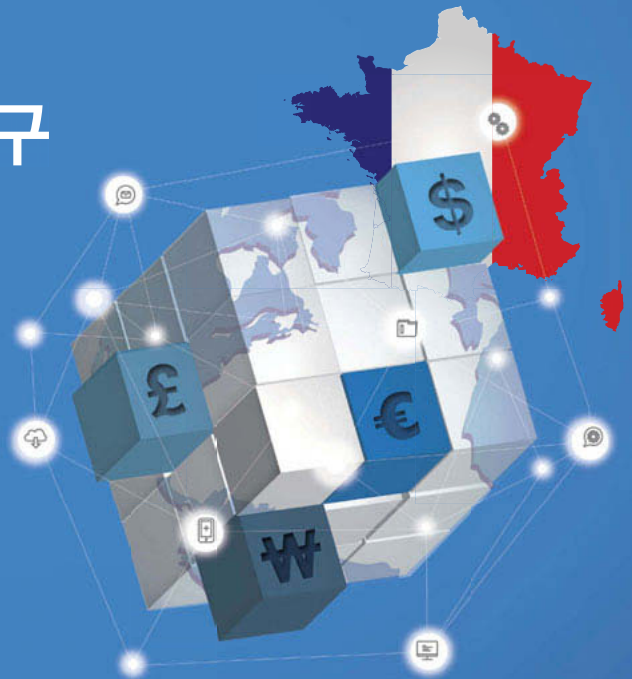
아우토반 건설로 실업문제가 해결됐을까?

프랑스 국가지분관리기구 (APE)의 주요역할과 시사점

정성호

재정통계분석팀 연구위원

jazzsh@kpfis.kr



정부는 공공자산(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책무가 있다. 정부가 공공자산을 운용(기업의 주식을 매수·보유하는 형태로)하는 경우, 정부 보유주식의 관리 및 처분 결정 등의 업무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공공자산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 운용은 물론 그 과정 및 절차가 법·정책에 부합되어야 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지분관리기구(APE)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는 눈여겨 볼만 하다.

국가의 지분관리가 필요한 부문은 직접 지분을 출자한 기관과 직접 출자는 하지 않았지만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국가가 지분을 관리해야 할 기관은 36개 공공기관이다. 아울러 국가가 직접 출자는 하지 않았지만 국가지분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67개 기금도 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더 세분화해보면 지분관리, 출자·배당금 관리, 유보금 관리, 여유자금 및 투자풀 운영으로 구분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적 해법으로 프랑스 정부조직 내 독립지분관리기구(APE)의 주요역할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프랑스 APE 설치 배경 및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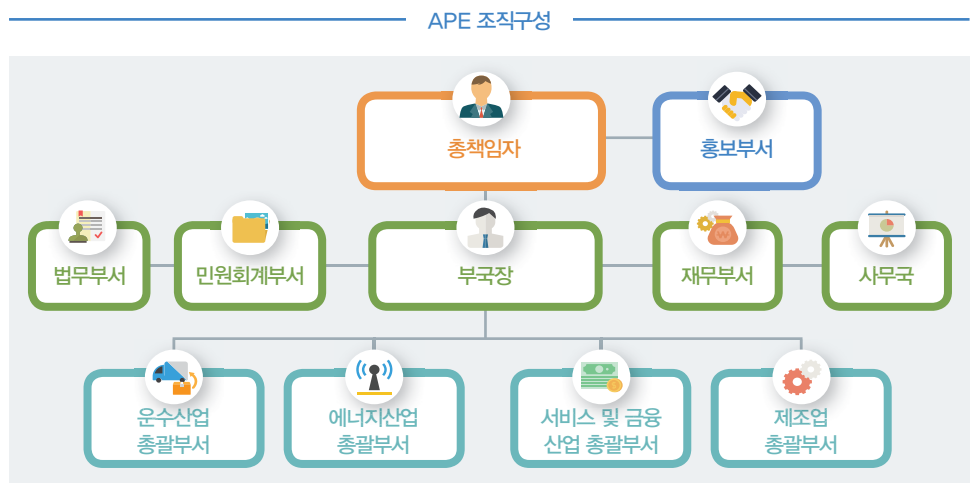
2000년대 초기, 프랑스 정부는 경제재건을 국정과제로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개혁 중 하나가 APE를 설치한 것이다. 1996년 장 폴 베사가 Snecma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주식 12,000주를 매입한 후 그 주식이 상장된 결과 약 10배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 것이다(Biseau, 2002). 이러한 Snecma¹(항공우주 엔진생산기업)의 비정상적 차익실현이 사회적·정치적 이슈가 되면

1. Snecma 그룹은 2005년 Sagem사와 합병되어 Safran Aircraft Engines(<https://www.safran-aircraft-engines.com/fr/>)이 되었으며, Snecma 그룹 당시 지분이 97%였으나, 2010년대에 들어 정부 보유 주식을 지속적으로 처분한 결과 프랑스 정부의 지분(2017년 4월 30일 기준)은 14%로 대폭 축소되었다.

서 국·공유기업의 소유 및 경영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산된다. 그로 인해 프랑스 정부는 공기업에 관한 소유 및 경영정책을 수립하였고, 정부소유주식의 총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 일련의 과정은 2002년 공기업 운영에 관한 조사위원회 설립, 2004년 「APE의 설치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APE의 인적 구성, 전문위원들의 신분 보장 및 권한 규정(재경부 내 별도의 전문기관, 국고국)을 구체화하였다.

프랑스 APE 조직구성 및 운영

APE 조직은 총 52명(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산업별로 총괄 임원은 27명이며, 출신별로는 경영엔지니어 63%, 민간기업 임원 27%, 경영대학원 졸업생 7%이다. 여기에 업무를 보조하는 전문부서(법무, 민원회계, 재무, 홍보) 직원은 25명이다. 합쳐보면, APE 조직은 전문경영인 출신 공무원이 산업별로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국가참여지분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자료: APE, Rapport d'activité, 2016-2017, p.17

APE가 관할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총 81개이며(〈부록 1〉 참고), 산업별로 네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첫째, 프랑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운수산업 분야의 기업은 철도운수 분야의 SNCF, 항공운수 분야의 Air France-KLM, 육상운수 분야(버스 등)의 RATP, 공항관리 분야의 Groupe ADP(파리공항), Aéroports de la Côte d'Azur(코트 다쥐르 공항), Aéroports de Lyon(리옹공항), 항만운수 분야의 Le Havre Port(르 아브르 항구), Marseille Fos(마르세이 항구), Dunkerque Port(딩케르크 항구) 등이다.

이 중 최근 APE의 활동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분야는 철도운수 분야인데, 2014년 8월 「철도 개혁에 관한 법률」 제2014-872호(Loi n° 2014-872)가 제정되면서 기존의 개별 철도운수회사들이 2015년 7월 하나의 공공철도그룹(groupe public ferroviaire, GPF)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개별 철도운수회사들(SNCF, SNCF Réseau, SNCF Mobilités 등)의 독립성은 훼손하지



않고 하나의 그룹으로 통합되어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관리를 통일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APE는 프랑스 정부와 GPF는 중장기 업무수행계약을 맺을 때 중개자 또는 정부의 대표자로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에너지산업 분야의 기업은 도시가스업 분야의 Engie, 전기생산 분야의 EDF, 우라늄 관련 분야의 Areva, 전기공급 분야의 RTE, ERDF 등이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대응 마련이 세간의 관심되고 있으며, 석유에너지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그 대체에너지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산업 분야의 성장과 환경보호가 양립이 가능하도록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2015년 8월,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이행에 관한 법률」 제 2015-992호(Loi n° 2015-992)가 제정되면서 석탄·석유 에너지로부터의 본격적인 탈피를 준비하였으며, EDF 등 기존 전력회사들의 경영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때 APE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EDF의 생존전략 간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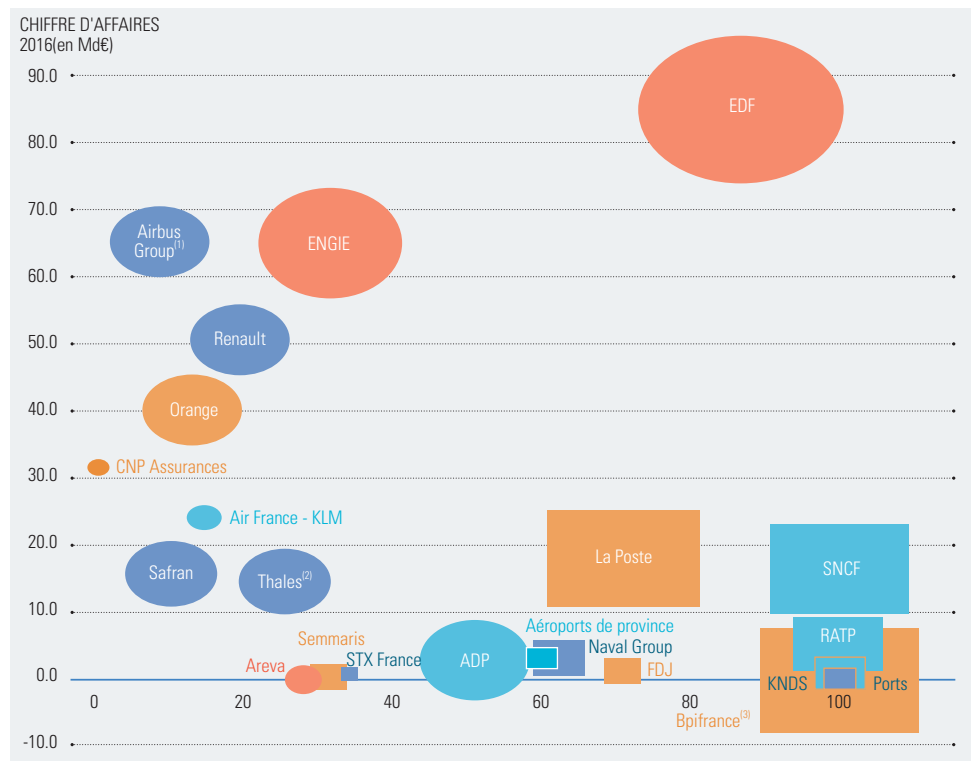
셋째, 서비스 및 금융산업 분야는 투자 분야의 BpiFrance, 통신 분야의 Orange, 체신 분야의 Groupe La Poste, 복권기금 분야의 FDJ, 보험 분야의 CNP, 금융업 분야의 Dexia, SFIL, Gungis, 방송 분야의 Radio France, France Télévisions, 주택 분야의 Société pour le logement intermédiaire, 인쇄 분야의 Imprimerie nationale, 공영방송사 등이다. 프랑스 정부는 정보통신매체의 발달에 따른 개별 방송통신사의 국가주주로서 기업에 대한 경영혁신을 요구하였는데, 방송통신서비스의 공공성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 분야가 지나친 자본경쟁에 의해 방송통신서비스가 불균형적·왜곡성장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2015년 프랑스 정부는 Radio France와 다년도 계약(2015~2019년)을 맺어 동 기업이 디지털시대의 대표 방송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6년 도에는 프랑스 정부와 France Télévision, Arte, France Media Monde 등 공영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APE가 중개자의 역할 또는 정부 대표로 참여하여 APE가 새로운 방송환경에 따른 방송통신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주도하였다. 결국 정부의 관심이 각 방송통신사의 경영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주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넷째, 제조업 분야는 항공·우주 산업(Airbus, Safran), 고속열차·철도 산업(Thales, Alstom), 조선·항만 산업(DCNS, STX France), 방위 산업(GIAT industries), 자동차 산업(Renault, PSA Peugeot Citroën), 화폐 산업(Monnaie de Paris) 등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2014년부터 공동방위산업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015년 12월 프랑스의 Nexter Systems와 독일의 KMW가 공동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럽 지상군의 방위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Nexter Systems(프랑스 정부 지분율 100%)이 프랑스-독일의 합작회사로 운영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유럽방위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APE는 Nexter Systems 등 방위산업 분야의 공기업들의 경영권 감독·지도는 물론 적정 정부지분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해당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였다. 2017년 기준,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의 지분 비율과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장기업의 정부소유지분에 관해 설명하면 EDF 83.4%, ENGIE 28.65%, ADP 50.6%, AIRBUS 10.9%, THALES 26.4%, ORANGE 13.5%, SAFRAN 14%, RENAULT 19.7%, AIR FRANCE-KLM 17.6%, AREVA 28.8%, ERAMET 25.7%, CNP 1.1%, DEXIA 5.7%이다.

2016 매출액(Md€)



주: 상장 기업 ○ 및 비상장 기업의 주식 □

1) Airbus의 지분 (11%)은 Sogepa

2) 탈레스의 26% 지분은 TSA를 통해 보유된다.

3) 정부가 100% 소유, 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150 M€) ~ 3천만 유로(3 M€)인 주요 회사: La Monnaie de Paris, LFB, Imprimerie Nationale, France Medias Monde, France Televisions, Radio France

자료: APE, Rapport d'activité, 2016-2017. p.11.

주식소유(지분)비율(2017.6.30.)

APE의 지분관리: 이중의결권

정부가 국가경제발전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해당 기업의 상당한 지분을 민간에 양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정책결정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보유주식을 대거 민간에 양도한 것은 지분 비율이 의결권 비율 감소와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프랑스 정부는 2015년 Safran 그룹의 지분양도에도 불구하고 동 기업에 대하여 15.39%의 지분 비율과 23.9%의 의결권을 보유하여 제1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2016년도에는 지분의 1.39%(5800만주)를 처분하여 동 기업에 대하여 지분이 14%로 감소하였음에도 21.9%의 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여전히 제1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지분 비율과 의결권 비율의 비대칭적 구조가 성립된 근본적인 이유는 2014년 3월 29일 의회를 통과하고, 같은 날 대통령이 공포한 「실물경제의 재정복을 위한 법률」 제2014-384호 제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이중의결권’(droits de vote double) 제도 덕택이다. 같은 호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 상법전(Code de commerce) 제L.225-123조에는 동일한 주식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그 주식에 관하여 이중의결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일면 주식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중장기 동안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물론 그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당사자가 바로 국가주주임은 부언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국가주주으로써 장기적 경제계획에 기초하여 민간경제에 참여하기 때문에 보유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장기적으로 보유한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가 Safran 그룹의 주식을 2015년도부터 처분하여 2016년도에 14%로 감소했다 하더라도 이중의결권 제도에 기인하여 Safran 그룹의 경영상 의사결정(21.9%의 높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Safran 그룹뿐만 아니라 Air France-KLM 등 다른 기업의 지분 일부를 향후 지속적으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당 기업의 영향력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프랑스 APE에 기초한 시사점

① 출자·배당, 유보, 여유자금 및 투자폴 활용 전략

먼저 배당금 관리에 관한 세부 전략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국고국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만 해당기관의 적자 발생 및 이월결손의 세부 원인을 파악하는 등 배당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이 수익으로 유보금을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듯하다. 재정건전성 관점에서 정부가 유보금 관리에 나설 때이다. 또한 여유자금 및 투자폴 운영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투자폴위원회(2차관 위원장)가 선정한 전문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자금예탁여부 예탁규모는 각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도 여유자금·투자폴 운영으로 이익실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APE가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이익실현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배당금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② 국가지분관리의 구체화: 이중의결권

현재 국가지분관리는 크게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공기업)의 경우에는 기재부 장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공공기관 경영일반에 대한 심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심사에만 그침)가 설치되어 기금운용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있다. 더 큰 한계는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를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한정하고 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3호).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소유 지분 50%, 30% 비율에 국한하지 않고 그 이하이더라도 정부가 총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구조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발휘함과 동시에 국가경제발전에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가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도 정부소유지분 30% 이상의 기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그보다 낮은 비율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이중의결권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국가지분관리조직 검토

기획재정부 국고국의 업무는 정부출자 및 배당에 관한 정책의 집행, 정부소유주식 및 출자증권의 평가·관리 및 처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3항). 현행법상으로 정부소유 주식에 관해 총괄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프랑스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정부소유주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소유주식 등의 관리를 위한 독립지분관리기구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는 현 지배구조를 고려해볼 때 위원회형보다는 집중형 독립기구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부록 2〉 참고). 독립 국가지분관리기구는 정부소유 지분관리와 경영평가(기준대로 공운위 활용) 등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더해 국가의 자산과 동일한 관점에서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부채관리기구(debt management office, DMO) 운영도 검토해볼 만하다. **나량**

참고 문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APE. Rapport d'activité, 2016-2017. at <https://www.economic.gouv.fr/agence-participations-etat>
- APE. Rapport financier, 2016-2017. at <https://www.economic.gouv.fr/agence-participations-etat>
- APE. Rapport d'activité, 2015-2016. at <https://www.economic.gouv.fr/agence-participations-etat>
- APE. Rapport financier, 2015-2016. at <https://www.economic.gouv.fr/agence-participations-etat>
- Biseou, Gr. (2002). Entreprises publiques: Francis Mer se voit en M. Propre, Liberation.

부록1 APE 관리 81개 공공기관

- Aeroport de Bale-Mulhouse
- Aeroport de Bordeaux
- Aeroport de Guadeloupe
- Aeroport de la Martinique
- Aeroport de la Reunion
- Aeroport de Marseille
- Aeroport de Montpellier
- Aeroport de Strasbourg
- Aeroport de Toulouse
- Aeroports de Paris (ADP)
- Air France-KLM
- Airbus
- ALSTOM
- AREVA
- Arte France
- BPI-Groupe (devient Bpifrance SA)
- Caisse nationale des autoroutes
- Casino d'Aix-les-Bains
- Consortium de realisation (CDR)
- Charbonnages de France (CDF)
- Civipol conseil
- CNP Assurances
- Compagnie generale maritime et financiere (CGMF)
- DCNS (Naval Group depuis le 28 juin 2017)
- Defense conseil internationale (DCI)
- Dexia
- Electricite de France (EDF)
- ENGIE
- ERAMET
- Fonds pour le developpement d'une politique intermodale des transports dans le massif alpin (FDPITMA)
- France Medias Monde
- France Televisions
- FSI-Equation
- GEAST
- GIAT Industries
- Grand port maritime de Bordeaux
- Grand port maritime de Dunkerque
- Grand port maritime de la Guadeloupe
- Grand port maritime de la Guyane
- Grand port maritime du Havre
- Grand port maritime de la Martinique
- Grand port maritime de Marseille
- Grand port maritime de Nantes - Saint-Nazaire
- Grand port maritime de la Reunion
- Grand port maritime de La Rochelle
- Grand port maritime de Rouen
- Holding SP
- Imprimerie Nationale
- KNDS
- Laboratoire francais du fractionnement et des biotechnologies (LFB)
- La Francaise des jeux
- La Monnaie de Paris
- La Poste
- ODAS
- Orange
- Port autonome de Paris
- Port autonome de Strasbourg
- Radio France
- Re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 (RATP)
- Renault
- Safran
- SEMMARIS
- Societe pour le Logement Intermediaire (SLI)
- SNCF Mobilites
- SNCF Reseau
- SNPE
- Societe concessionnaire francaise pour la construction et l'exploitation du tunnel routier sous le Mont-Blanc (TMB-Autoroutes et tunnels du Mont-Blanc)
- Societe de financement local (SFIL)
- Societe de gestion de garanties et de participations (SGGP)
- Societe de prise de participation de

l'Etat (SPPE)

- Societe de valorisation fonciere et immobiliere (SOVAFIM)
- Societe des chemins de fer luxembourgeois
- Societe francaise du tunnel routier du Frejus (SFTRF)
- Societe francaise d'exportation de systemes avances (SOFRESA)

- Societe internationale de la Moselle
- Societe nationale maritime Corse Mediterranee (SNCM)
- Societe technique pour l'Energie Atomique
- SOGEPA
- STX France
- Thales
- TSA

부록2 주요국 공공기관 소유권 관리기구

유형	국가	관리기구	소속
분산형 (sectoral model)	영국	SE	기술혁신부
	캐나다	TBS	TBS
이원형 (dual model)	스위스	FAA	재무부
	헝가리 (위원회형)	HNAM	국가개발부
	한국 (위원회형)	공운위(연운위)	기재부(복지부)
집중형 (central model)	핀란드 (독립기구형)	SOSD	총리직속
	프랑스 (독립기구형)	APE	재무부
	뉴질랜드 (독립기구형)	COMU	재무부
	스웨덴 (독립기구형)	SOD	재무부
	싱가포르 (지주회사형)	테마섹	재무부

e나라재산시스템을 활용한 공간정보 기반의 효율적 국유재산관리

윤정수

dBrain운영본부 자산정보팀 차장

jsyoon@kpfis.kr

박정오

dBrain운영본부 자산정보팀 과장

pjo77@kpfis.kr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른 ‘국유재산의 총괄관리 강화 및 위임·위탁기관의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실무적 지원이 가능하며 국유재산 정보의 통합관리 및 제공 가능한 e나라재산시스템이 2015년 8월에 전체 기능에 대해 오픈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e나라재산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e나라재산시스템의 구축경과 및 운용 현황, e나라재산시스템에서의 공간정보 활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간정보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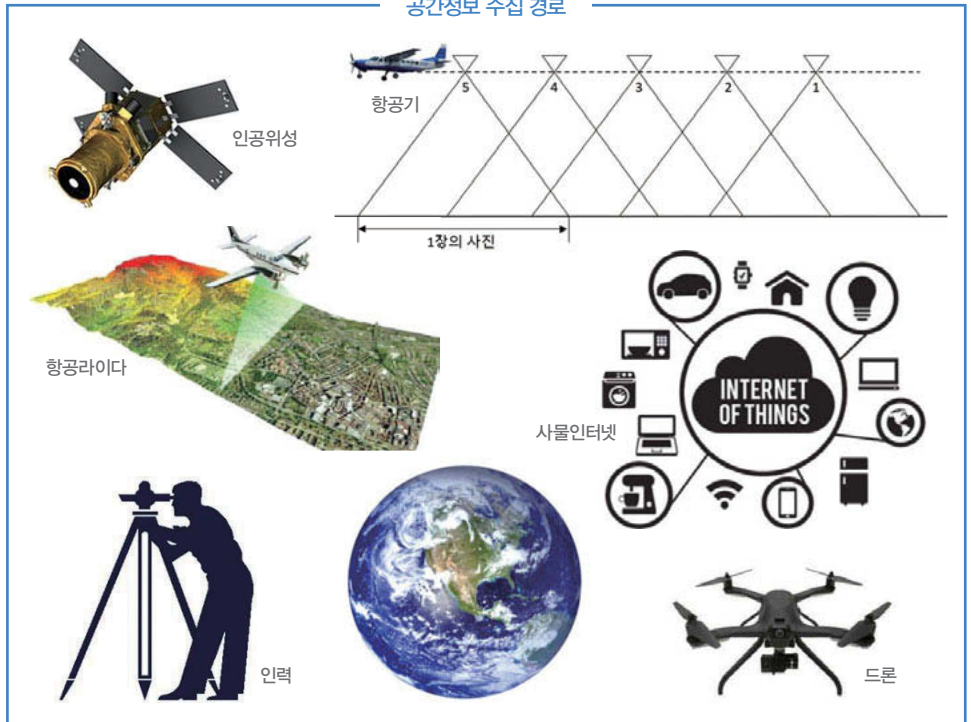
01

공간정보란 무엇일까?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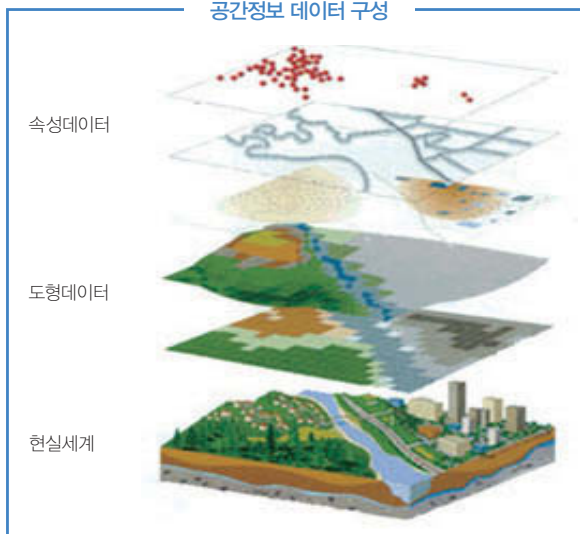
21세기 정보문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의 생활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산업문명사회에서는 도로, 항만, 공항 등 물리적인 기반시설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었지만, 정보문명사회에서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또는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와 같은 컴퓨터 응용시스템이 사회전반에 걸쳐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수집은 인공위성, 항공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수집 경로



수집된 공간정보와 지도서비스 연관성

공간정보 데이터 구성



현실세계에 대해 여러 측정방식으로 수집된 공간정보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도형데이터와 속성데이터로 구성됩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 종이지도가 전자지도로 제작되면서 지형의 형태 및 지물과 같은 도형정보 이외에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정보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자지도는 인터넷이나 다양한 전자매체를 통해 다른

많은 정보와 융합한 시스템 구축이 되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에서의 활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현황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지수는 세계 21위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공간정보 인프라 시설 및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11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간정보의 제도적 역량 20위, 사용자의 적용 수준 21위, 산업생산능력 16위 등 저조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공간정보지수 세계 하위권' (검색일: 2017.6.15)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공간정보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1995년부터 국가 GIS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많은 기관들이 토지, 도로, 지하시설물, 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GIS 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하였으나, 각 기관 및 부처별로 구축된 시스템들은 상호호환성이 떨어지고, 중복개발 논란이 있고 시스템 간 연계체계의 미비로 인한 공간정보의 최신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가에서는 다수의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구축, 활용되는 공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공간정보를 연계하여 정책결정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과 공간정보의 연관성

국유재산과 공간정보를 설명하기에 앞서 국유재산에 대해 짧게 적어보면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국가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이고, 좁은 의미는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 제5조의 적용대상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단순하게는 국유재산의 위치 파악이나, 텍스트로 관리하고 있는 대장정보가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을 위해 업무담당자들은 민간에서 제공되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에서 공간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에 활용했으나, 많은 시간과 제한적인 정보수집에 대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구축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유재산업무에 특화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구축 배경 및 경과와 공간정보 활용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나라재산 시스템 구축 배경 및 경과 02

추진배경

국유재산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dBrain시스템은 국가 예산·결산 기능 중심의 시스템으로 네트워크 보안상 국유재산업무 처리에 필수적인 타 시스템과 기능 및 데이터의 직접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장조사가 동반되어야 하는 국유재산 업무의 특성상 dBrain대장정보만으로 업무 수행의 한계가 있어 시각적인 GIS공간정보의 융합·활용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을 분산 구축하여 칸막이 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종합적인 재산관리에 한

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국유재산정보관리체계는 민간기관이나 개인 등 국민 일반에 대한 접근성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어 민간의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구축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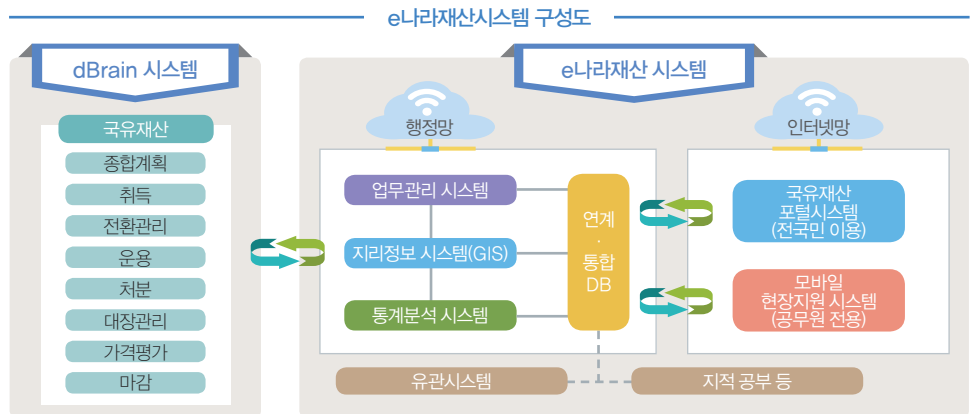
2012년 6월 제2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안건이 상정·의결되어 전자정부지원사업 방식으로 3단계(2012년 11월 ~2014년 12월)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12년 1단계 사업(장비도입, 업무관리·GIS시스템 일부기능 구축, 통합DB설계) 및 2013년 2단계 사업(업무관리 고도화, 유관기관 통합DB연계, GIS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3단계 사업을 통해 5개(업무관리, GIS, 모바일현장지원, 통계분석, 포털)로 구성된 e나라재산시스템을 완성하였습니다.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단계적인 오픈을 거쳐 8월 27일 전체 오픈을 하였으며, 2016년 7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시스템 운영을 위탁 받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나라재산 시스템 소개 03

시스템 구성

e나라재산시스템은 기존 dBrain시스템과 유관시스템, e나라재산의 5개 단위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국유재산의 총괄관리 강화 및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적 지원과 함께 국유재산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별 소개

행정망

- DB연계·통합·공유 분산·구축하여 운영 중인 국유재산 관리자로 및 지적공부를 연계·통합하여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업무관리 시스템**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위한 7단계 Life-Cycle인 '계획→취득→전환→운영→개발→처분→결산'의 전 과정을 신속·정확·편리하게 통합처리
- **GIS 시스템** 국유재산에 대한 토지·건물 주제도, 통계지도, 지역별 국유재산 현황 등 현장감 있는 공간 정보를 구현하여 활용가능 재산 파악 등의 의사결정지원 기능 수행
- **통계분석 시스템** 다양한 정형 통계 및 사용자 맞춤형 비정형 통계의 추출 기능을 통해 국유재산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 제공

인터넷망

- **국유재산 포털** 국유재산 관련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류재산 활용 아이디어 제안 기능 등의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기반 구축
- **모바일 현장지원** 국유재산 담당자의 현장 조사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현장조사 지원 체계 구축

e나라재산의 공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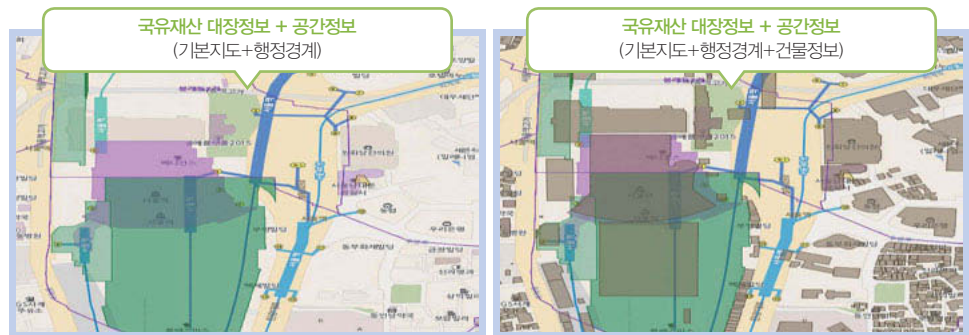
활용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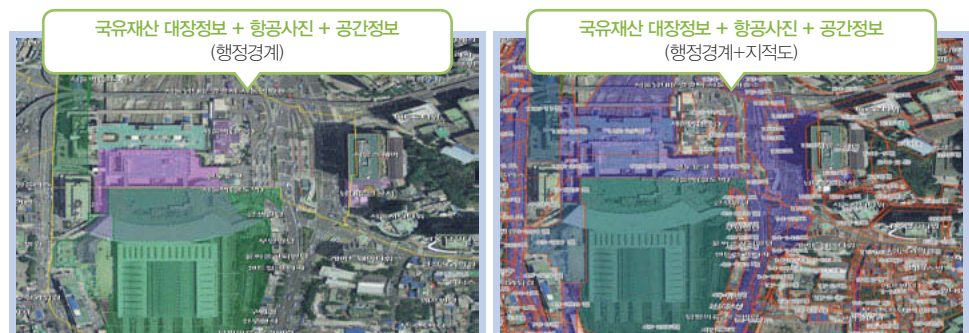
e나라재산의 공간정보

e나라재산에서 현재 서비스하는 공간정보는 먼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국토교통부 산하 공간정보 통합 및 관리기관)로부터 분기별로 공간정보 52종(지적도(1종), 토지이용규제(41종),

공간정보 활용사례1



공간정보 활용사례2



건물(1종), 인터체인지(1종), 주요시설물(3종), 행정경계(4종), 지하철(1종))을 수신 받아 e나라재산 서버에 구축하여 dBrain대장정보와 융합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현장감 있는 지도서비스를 위해 항공사진과 위성영상 정보를 제공하여 국유재산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e나라재산 서비스 확대 노력

주기적으로 브이월드로부터 최신 항공사진을 받아 연도별 촬영을 확대하여 시계열비교 등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 업무편의를 위해 하이브리드 맵(지하철역, 주요 건물 및 지형지물, 국도·순환도로·고속도로 구분 등을 항공사진에 입혀 가독성을 높여주는 지도 정보) 정보를 확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추진 중인 ‘국유재산 총조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촬영한 드론영상도 e나라재산시스템에 구축함으로써 각 부처 국유재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드론사진을 활용한 무단점유 확인사례

구분	항공 사진('12년)	드론 조사 사진('16년)
사진		
조사결과	도로의 일부 면적이 현황 나대지로 건물 등으로 점유 확인 건물로 점유된 나대지 부분은 필지 분할 후 용도폐지 필요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맺음말 05

공간정보는 이미 우리생활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활용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최근 급변하는 첨단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활용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기술혁신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국유재산 관리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혁신 기술을 활용하고, 다양한 공간정보와의 접목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의 중심이 될 e나라재산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나래**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01 월간 재정통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재정운용동향

총수입

359.2조 원

총지출

345.2조 원

통합재정수지

14.0조 원

관리재정수지

-17.3조 원

2018년 9월 중 총수입은 32.1조 원, 총지출은 34.1조 원이다.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359.2조 원으로 진도율은 80.2%이고 전년 동기 대비 29.6조 원 증가(진도율 2.3%p 상승)하였다.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345.2조 원으로 진도율은 79.8%이고 전년 동기 대비 28.2조 원 증가(진도율 2.5%p 상승)하였다.

(단위: 조 원, %)

	2017년				2018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총수입 (진도율)	329.6 (77.9)	372.4	399.2	430.6	50.8	77.4	121.2	169.9	214.0	243.8	291.9	327.1	359.2 (80.2)
총지출 (진도율)	317.0 (77.3)	345.2	370.0	406.6	35.8	76.5	122.9	169.6	205.3	247.3	282.7	311.1	345.2 (79.8)
통합재정수지	12.7	27.2	29.2	24.0	15.0	0.9	-1.8	0.2	8.7	-3.5	9.8	16.0	14.0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1.2	34.6	37.9	42.5	2.5	4.8	8.8	13.8	17.9	22.0	24.7	28.0	31.3
관리재정수지	-18.5	-7.4	-8.8	-18.5	12.6	-3.9	-10.5	-13.6	-9.2	-25.5	-15.5	-12.0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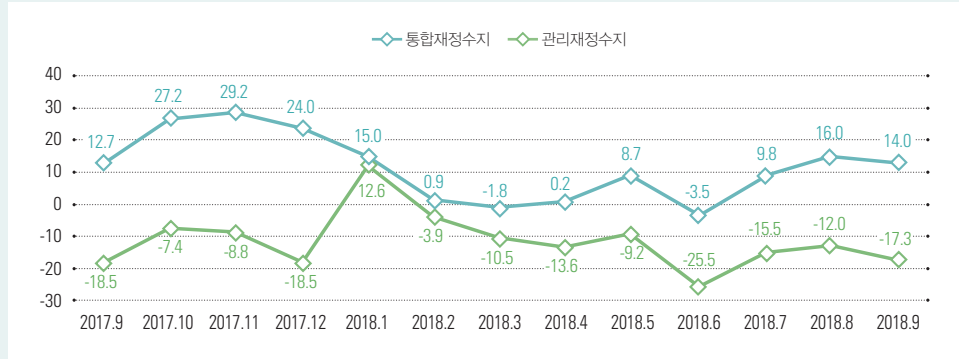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go.kr)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4.0조 원 흑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31.3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3조 원 적자이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4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1.3조 원 개선되었다.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국세수입 추이

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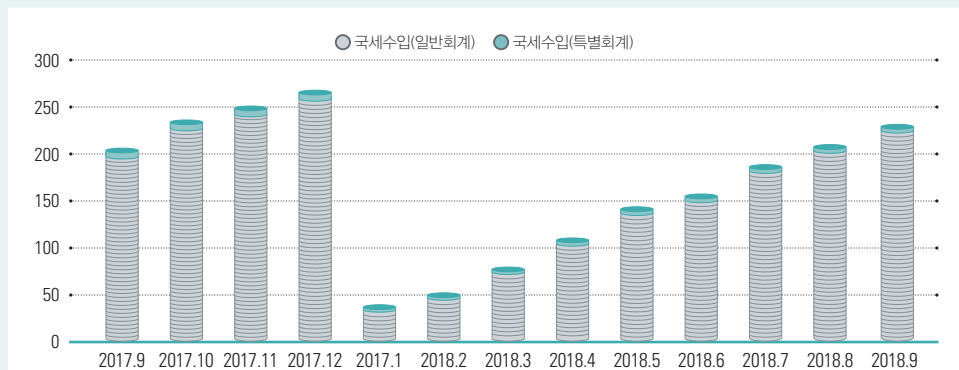
227.7 조 원

특별회계

6.0 조 원

2018년 9월 중 국세수입은 20.5조 원(소득세 3.7조 원, 법인세 10.1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조 원 증가하였다.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233.7조 원이며, 일반회계 227.7조 원과 특별회계 6.0조 원으로 구성된다.

(단위: 조 원)



	2017년						2018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총국세수입	207.1	236.9	251.9	265.4	36.6	49.9	78.8	109.8	140.7	157.2	190.2	213.2	233.7
일반회계	202.0	231.0	245.7	258.5	35.4	48.4	76.8	106.6	137.0	152.9	184.9	207.6	227.7
특별회계	5.1	6.0	6.3	6.9	1.2	1.5	2.0	3.2	3.8	4.3	5.3	5.6	6.0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중앙정부 채무

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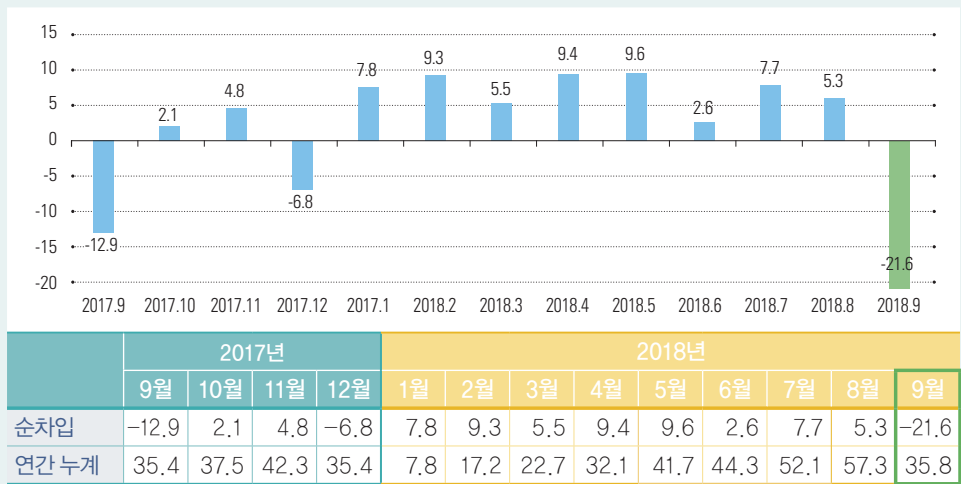
순차입 추이

순차입 전월 대비

-21.6조 원

2018년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3.2조 원이다. 순차입 규모는 국고채권 상환(-22.5조 원), 국민주택채권(1.0조 원) 잔액 증가 등에 따라 전월 대비 21.6조 원 감소하였다. 2017년 9월과 비교할 때 월별 순차입액은 8.7조 원 감소하였다.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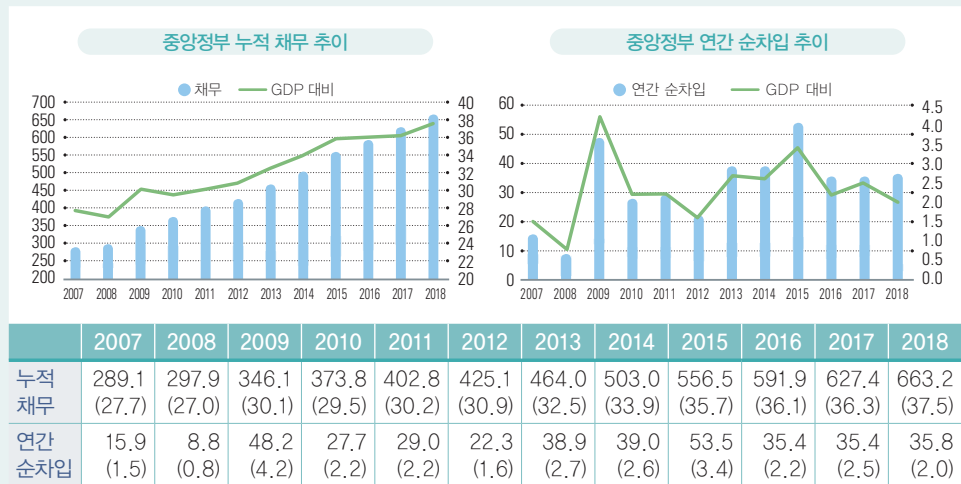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중앙정부

채무 추이

누적 채무

663.2조 원



주 1) 괄호 안은 GDP 대비 비중

2) 2018년 GDP는 한국은행 전망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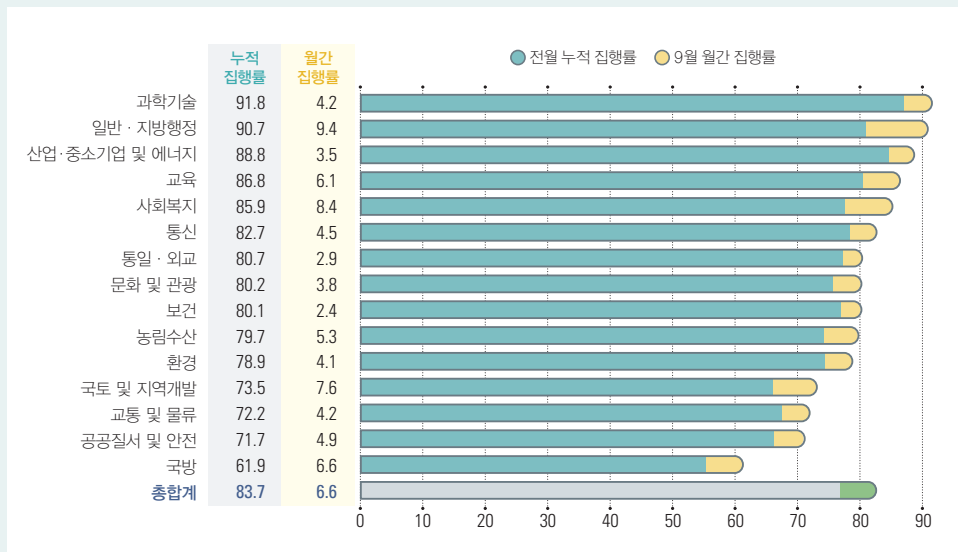
주요 관리대상사업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야별 집행실적

9월 누적 집행률
83.7%

2018년도 주요 관리대상사업 9월 말까지의 누적 집행액은 238.6조 원 중 199.7조 원으로, 계획 대비 83.7%를 집행하였다. 분야별 누적 집행률은 과학기술(91.8%), 일반·지방행정(90.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88.8%), 교육(86.8%) 분야의 순으로 높으며, 국방(61.9%), 공공질서 및 안전(71.7%), 교통 및 물류(72.2%) 분야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9월 월간 집행액은 15.9조 원(6.6%)이며, 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9.4%), 사회복지(8.4%), 국토 및 지역개발(7.6%) 분야의 월간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고보조금

2018년 국고보조금 예산(본예산 기준)은 66.9조 원으로 전년도 예산 59.6조 원에 비해 약 7.3조 원 증가하였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예산현액은 69.0조 원이며, 9월 누적 집행실적은 39.6조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7.4%이다(9월 누적 교부액은 예산현액 대비 77.7%).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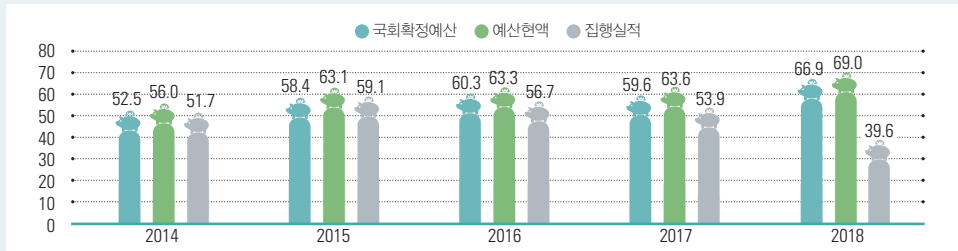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9월 누적 집행률

57.4%

(단위: 조 원)



주: 2018년은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집행행액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분야별

국고보조금

집행률

가장 높은 교부집행률

98.8%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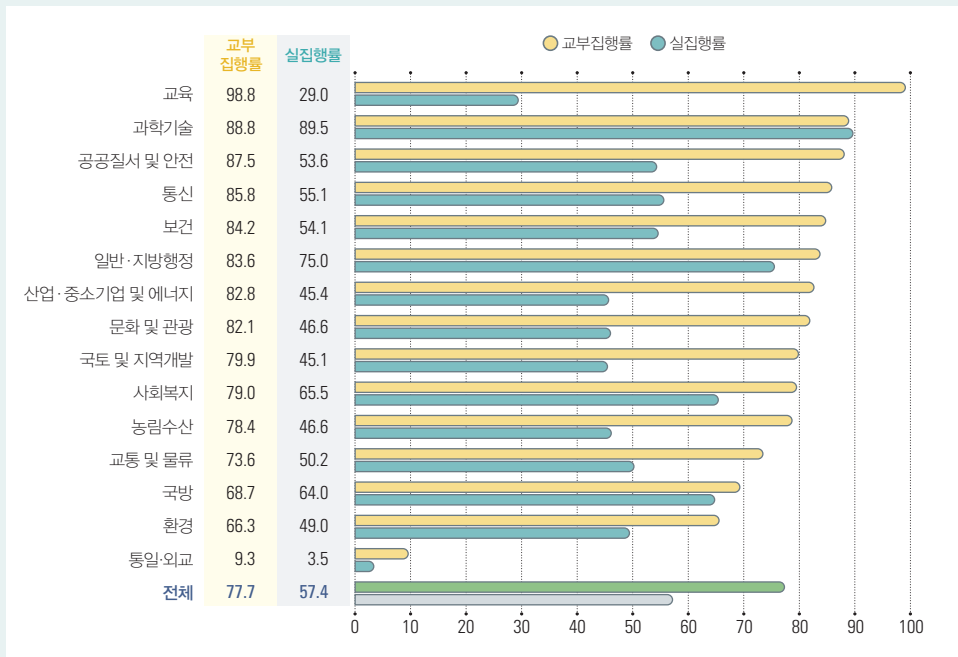
가장 높은 실적집행률

89.5%

(과학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25조 1,575억 원, 농림수산 4조 3,468억 원, 환경 2조 2,709억 원, 문화 및 관광 1조 9,41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조 5,003억 원 실행되었다. 예산현액 대비 교부집행률은 교육 분야가 98.8%로 가장 높지만, 예산현액 대비 실적집행률은 과학기술 분야가 89.5%로 가장 높다.

(단위: %)



주: 2018년 9월 누적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02 테마통계: 일반·지방행정 분야

이번호는 15대 분야(예비비 제외) 중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지출 현황 및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 + 사회복지
- + 통일·외교
- + 일반·지방행정
- + 보건
- + 문화·관광
- + 교통·물류
- + 환경
- + 과학기술
- + 교육
- + 공공질서·안전
- + 통신
-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농림·수산
- + 국방
- +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정구조와 추이

2019년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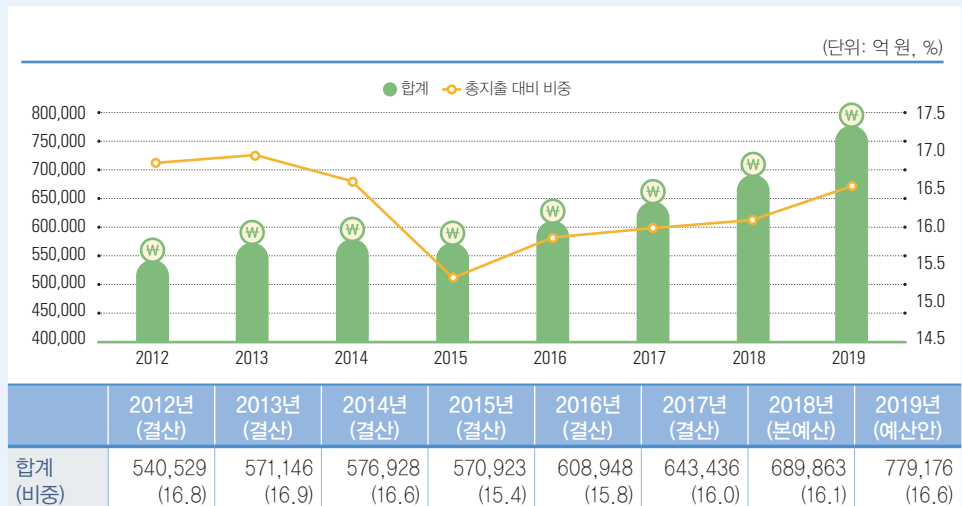
77.9조 원

2018년 본예산

69.0조 원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16% 내외를 차지하며, 2015년 이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19년도 일반·지방행정 분야 규모(예산안 기준)는 77.9조 원(총지출 대비 16.6%)이며, 2018년 본예산 대비 12.9%인 8.9조 원 증가하였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지출 규모는 2016년에 60조 원, 2019년에는 70조 원을 넘었다. 2019년 예산안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재정보강 차원의 지방교부세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전자정부 및 정부혁신 사업 증액, 혁신 경제를 위한 핀테크 지원사업,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 등이 있다.



주 1)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회계·기금별 현황 (2019년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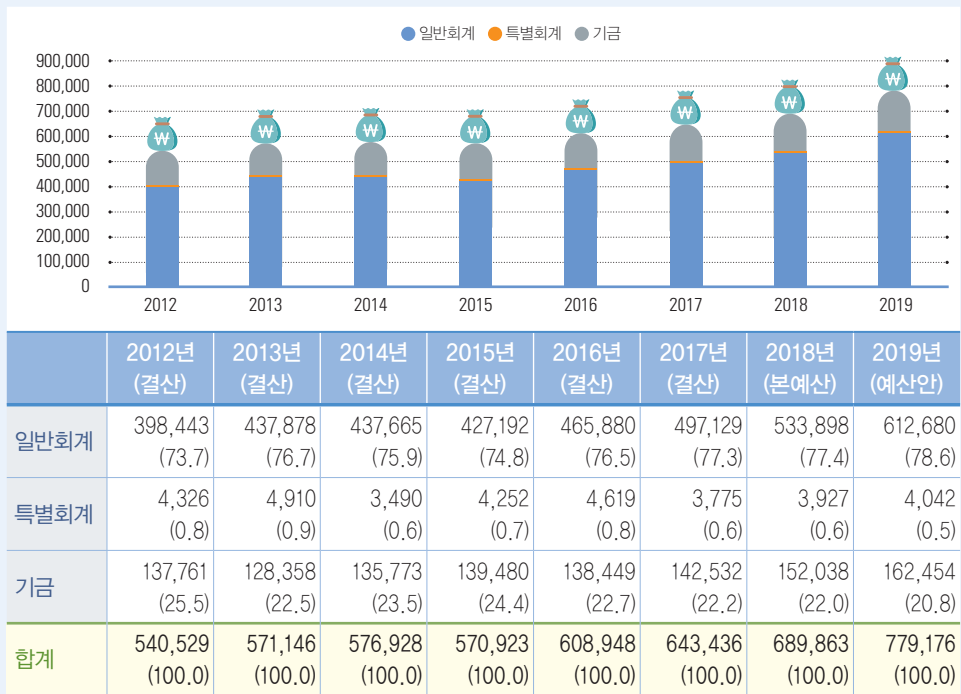
일반회계
61.3조 원

특별회계
0.4조 원

기금
16.2조 원

2019년 예산안 기준 일반·지방행정 분야 총지출은 일반회계 61.3조 원(일반·지방행정 분야 총지출 대비 78.6%)¹, 특별회계 0.4조 원(0.5%), 기금 16.2조 원(20.8%)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은 보통교부세 사업이 대표적이다. 특별회계는 책임운영기관인 조달청 특별회계가 있다. 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이자상환, 복권기금 사업비 등이 있다.

(단위: 억 원, %)



주 1)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일반·지방행정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주요 기금의 사업비 추이 (2019년 예산안)

2019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지방행정 분야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은 총 4개이다. 기금별 운용규모는 공공자금관리기금 12.9조 원(일반·지방행정 분야 기금 대비 79.6%), 복권기금 2.9조 원(일반·지방행정 분야 기금 대비 17.8%), 국유재산관리기금 0.4조 원(일반·지방행정 분야 기금 대비 2.2%), 공적자금상환기금 625억 원(일반·지방행정 분야 기금 대비 0.4%) 순으로 크다.

¹ 이하 비율은 모두 일반·지방행정 분야 총지출 대비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12.9조 원

복권기금

2.9조 원

(단위: 억 원, %)

	2012년 (결산)	2013년 (결산)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공공자금관리기금	114,039 (82.8)	105,157 (81.9)	111,525 (82.1)	114,045 (81.8)	111,948 (80.9)	114,249 (80.2)	121,127 (79.7)	129,349 (79.6)
복권기금	20,900 (15.2)	21,020 (16.4)	21,663 (16)	22,888 (16.4)	24,433 (17.6)	26,279 (18.4)	28,142 (18.5)	28,967 (17.8)
국유재산관리기금	2,822 (2.0)	2,180 (1.7)	2,216 (1.6)	2,547 (1.8)	2,067 (1.5)	2,000 (1.4)	2,148 (1.4)	3,512 (2.2)
공적자금상환기금	0.02 (0.0)	0.4 (0.0)	369 (0.3)	0.02 (0.0)	2 (0.0)	4 (0.0)	622 (0.4)	625 (0.4)
합계	137,761 (100.0)	128,358 (100.0)	135,773 (100.0)	139,479 (100.0)	138,449 (100.0)	142,532 (100.0)	152,038 (100.0)	162,454 (100.0)

주 1)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일반·지방행정 분야 기금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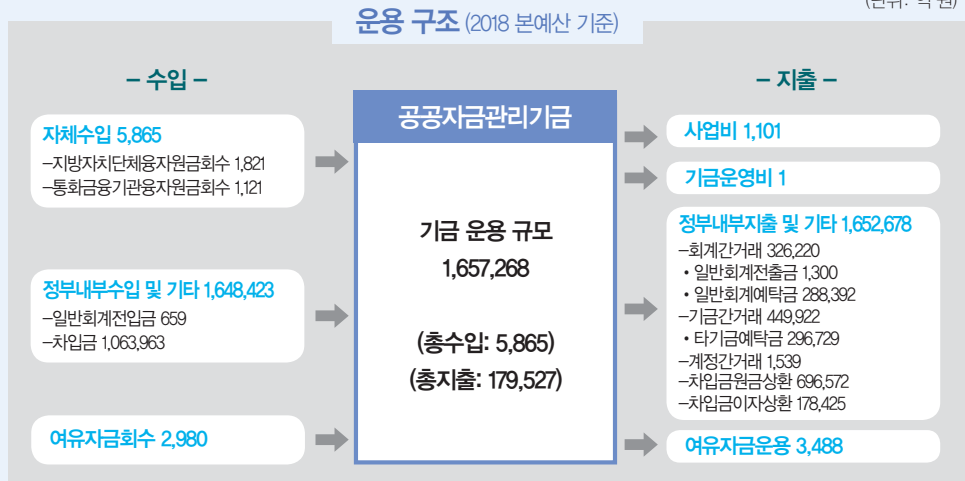
(2018년 본예산)

운용 규모(총계)

165.7조 원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기금 중 지출 비중이 높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복권기금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다른 회계·기금 전입금, 일반회계 출연금, 국채발행수입, 세계 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일반회계 또는 타 기금으로의 예탁, 국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지출된다. 운용 규모는 2018년 본예산(총계) 기준 165.7조 원이다.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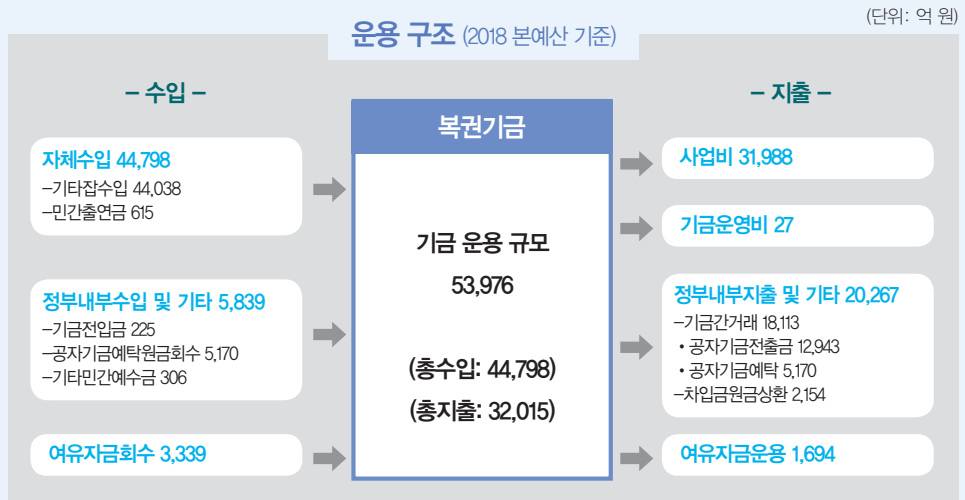


복권기금 운용 구조 (2018년 본예산)

운용 규모

5.4조 원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 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복권기금은 복권 발행, 복권기금 운용 수익, 정부 이외로부터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출한다. 운용 규모는 2018년 본예산(총계) 기준 5.4조 원이다.



부문별 현황 (2019년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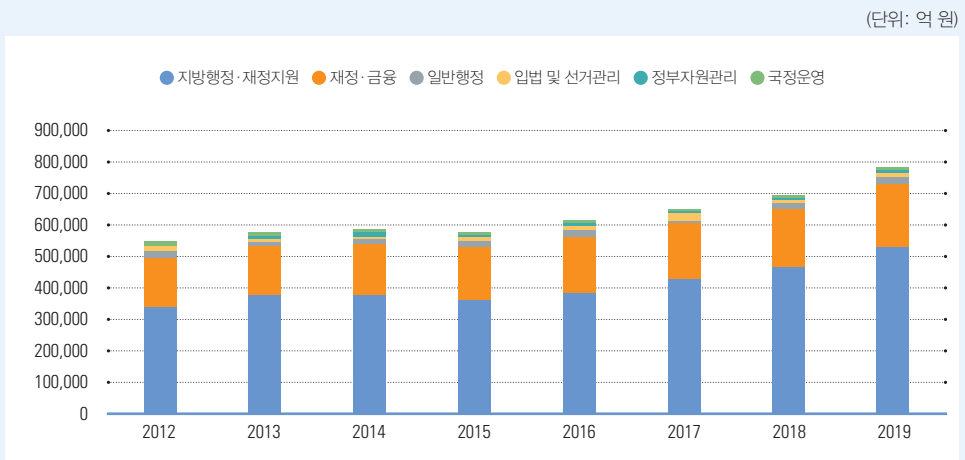
지방행정·재정지원

53.6조 원

재정·금융

19.4조 원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의 총지출 규모는 53.6조 원이며,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2년 63.1% 대비 5.6%p 증가).





	2012년 (결산)	2013년 (결산)	2014년 (결산)	2015년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지방행정·재정지원	341,084 (63.1)	378,579 (66.3)	377,750 (65.5)	365,995 (64.1)	388,063 (63.7)	431,228 (67.0)	467,363 (67.7)	535,571 (68.7)
재정·금융	155,744 (28.8)	153,351 (26.8)	159,903 (27.7)	163,078 (28.6)	176,830 (29)	167,215 (26.0)	177,377 (25.7)	193,746 (24.9)
일반행정	19,063 (3.5)	18,475 (3.2)	18,476 (3.2)	20,822 (3.6)	19,879 (3.3)	19,777 (3.1)	21,407 (3.1)	25,201 (3.2)
입법 및 선거관리	13,076 (2.4)	9,096 (1.6)	8,570 (1.5)	8,463 (1.5)	11,784 (1.9)	12,689 (2.0)	10,479 (1.5)	10,297 (1.3)
정부자원관리	6,547 (1.2)	6,384 (1.1)	6,667 (1.2)	7,298 (1.3)	7,174 (1.2)	7,318 (1.1)	7,599 (1.1)	8,492 (1.1)
국정운영	5,016 (0.9)	5,260 (0.9)	5,562 (1.0)	5,267 (0.9)	5,219 (0.9)	5,208 (0.8)	5,638 (0.8)	5,869 (0.8)
합계	540,529 (100.0)	571,146 (100.0)	576,928 (100.0)	570,923 (100.0)	608,948 (100.0)	643,436 (100.0)	689,863 (100.0)	779,176 (100.0)

주 1)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일반·지방행정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주요 사업

(2019년 예산안)

지방교부세

52.8조 원

복권사업비

2.7조 원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지방교부세를 제외하면 개별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다. 주요 계속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전자정부 사업,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 사업 등이 있으며, 2019년 주요 신규 사업은 혁신 경제를 위한 핀테크 지원, 근로·자녀장려세제 규모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 사업,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재구축 사업 등이 있다.

(단위: 억 원)

부문	사업명	2018년	2019년	비고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459,805	527,745	계속사업
	정부혁신·전자정부	7,263	8,712	
기획재정부	복권사업비	26,003	26,636	신규사업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정보화)	—	230	
국세청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	82	신규사업
금융위원회	핀테크 지원사업	—	80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회,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

지방교부세 (2019년 예산안)

52조
7,745억원

지방교부세²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을 고려하여, 지방행정·재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세원배분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도에는 2018년도 예산 45조 9,805억 원 대비 6조 7,940억 원 증액(14.8%)한 52조 7,745억 원을 편성하였다. 교부세 증액은 2019년도 내국세 및 종합부동산세 추정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 확충된 재원은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정부혁신·전자정부 (2019년 예산안)

8,712억원

정부혁신·전자정부 사업은 2018년도 7,263억 원에서 2019년 8,712억 원으로 20% 증액하였다. 2018년 3월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추진 계획에 따른 사회적 가치 확산,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중점 편성하였다. 정부혁신 주요 사업은 지방행정 혁신 강화를 위한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사업(149억 원),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101억 원) 등이 있으며, 전자정부 주요 사업은 전자정부 사업 지원(901억 원),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335억 원) 등이 있다.

복권사업비 (2019년 예산안)

2조
6,636억원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복권사업비는 복권 판매 사업에 소요되는 당첨금, 판매수수료, 위탁수수료 등이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633억 원 증액된 2조 6,636억 원을 편성하였다. 복권 판매 수입은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4조 5,571억 원이며, 판매 수입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35%는 법정배분 사업³에, 나머지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법정배분 사업 규모는 7,206억 원이며, 과학기술진흥기금(953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754억 원) 등으로 전출한다. 공익사업 규모는 1조 4,604억 원이며,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등 사업(5,927억 원), 금융위원회 햇살론(1,750억 원) 등의 사업에서 사용한다.

² 지방교부세는 정률분,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된다. 정률분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라, 해당연도 내국세의 19.24%에 전년도 정산액을 더한 규모로 정해진다. 교부세액 중 정률분의 97%는 보통교부세로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정률분의 나머지 3%는 특별교부세로서 지역현안, 재난복구비용 등으로 교부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국도 균형발전 재원으로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교부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교부한다.

³ 복권위원회가 조직되기 전까지 복권발행에 참여했던 기금 등에 배분하는 금액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진흥기금 등 10개 법정 배분기관에 배분한다.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전면재구축 (2019년 예산안)

230^억원

다음은 주요 신규 사업이다. 먼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재구축 사업 예산을 230억 원 편성하였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2007년부터 예산편성, 집행, 결산, 성과관리 등 재정 활동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던 시스템으로, 재정개혁 및 효율적 운용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10년의 운영기간에 따른 노후화로 시스템 운영 안정성 및 확장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고 재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다. 총 사업비는 1,180억 원(2013년 정보화 전략계획 기준)이다.

근로·자녀장려 세제 운영 (2019년 예산안)

82^억원

근로·자녀장려세제⁴ 운영 사업은 2019년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신청안내·결정 통지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82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전에는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사업의 내역 사업(근로·장려세제 홍보 사업)이었으며, 근로·장려세제 신청·지급 과정에서 통상적인 비용으로 집행하던 것을 2019년부터 신규 재정 사업으로 편성한 것이다. 이 사업은 안내문 제작 및 발송 우편비용 53억 원, 안내인력 인건비 16억 원, 대중매체 홍보비 12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핀테크 지원 (2019년 예산안)

80^억원

핀테크⁵ 지원사업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신규로 80억 원을 편성하였다. 핀테크 지원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의 일환이며, 전액이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집행된다. 이 사업은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48억 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19억 원),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행사(9억 원) 등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된다. ^{나관}

⁴ 근로·자녀 장려세제는 정부의 조세지출 중 하나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소득세 전액과 일정 금액을 더해 지급하는 음의 소득세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와 자녀장려세제(CTC: Child Tax Credit)로 구성된다. 근로장려세제는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근로 유인 및 소득지원을 위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자녀장려세제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 장려 및 양육비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녀 장려세제는 2019년부터 소득기준 및 연령·재산요건 등이 완화하여 수급대상을 275만 가구에서 445만 가구로 확대하고 총지급 규모도 1.8조 원에서 5.8조 원 규모로 대폭 증가한다.

⁵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결제, 대출, 주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은행 서비스를 온라인에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하거나 불편했던 분야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간편결제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달의 이슈키워드: 아시안게임

김상기
재정통계분석팀 연구원
sgkim@kpfis.kr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아시안게임’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체육 진흥을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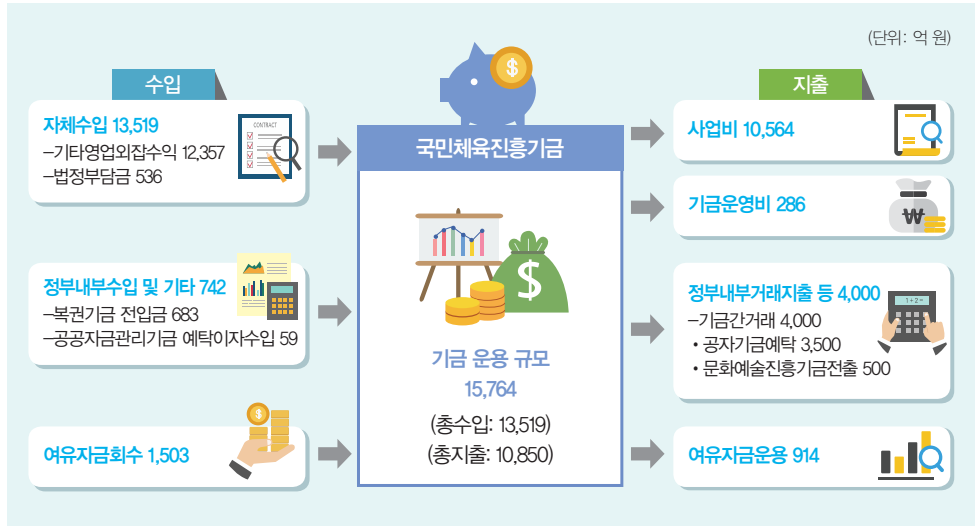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어론수렴시스템(big.pr.go.kr, 2018.10.18.), 수집기간: 2018.9.1.~9.30.

체육 관련 예산과 국민체육 진흥기금

2018년 우리나라의 체육 부문 예산은 총지출 428.8조 원의 0.3% 수준인 1조 1,850억 원이며, 이 중의 91.6%(1조 850억 원)를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담당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체육진흥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1972년에 설치된 기금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¹ 사업의 수입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으며, 조성된 재원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국민체육시설 확충 및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운용 구조를 보면 2018년 총계 기준 운용 규모는 1조 5,764억 원(총지출 기준 1조 850억 원)으로 수입은 법정부담금 536억 원 등 자체수입 1조 3,519억 원,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83억 원 등 정부내부수입 742억 원, 여유자금회수 1,503억 원으로 구성된다. 반면에 지출은 사업비 1조 564억 원, 운영비 286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3,500억 원 등 정부내부거래지출 4,000억 원, 여유자금운용 914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¹ 대중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씨름)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투표권을 판매해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공익사업으로 토토(Toto)와 프로토(proto) 등 2가지 종류가 있다.



주: 본예산 기준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18 회계·기금 운용 구조」, 2018

체육진흥을 위한 2018년 주요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제고하는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3,866억 원), 우수 선수를 육성하는 전문체육 육성 프로그램(3,279억 원), 국내 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 체육교류를 활성화하는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2,799억 원), 장애인 체육을 진흥하는 장애인체육 육성 프로그램(62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위: 억 원, %)

기금	프로그램	금액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 육성	3,866
	전문체육 육성	3,279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2,799
	장애인체육 육성	620
	기금운영비	286
	계	10,850

주: 총지출,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3,866억 원)에는 체육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이 있다. 전국 각지에 국민체육센터 40개소, 개방형다목적체육관 29개소를 건립하고(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561억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한부모지원가구 등)의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유소년 및 청소년에게는 1인당 최대 8만 원까지 스포츠강좌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201억 원).



전문체육 육성 프로그램

전문체육 육성 프로그램(3,279억 원)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우수 선수를 육성함으로써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선수양성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5개 종목의 7개 스포츠단체와 5개 아마추어협회를 지원하며 리그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람 환경을 개선하는 등 프로·아마추어스포츠 및 유소년스포츠를 활성화하고(주최단체지원사업, 1,274억 원), 국가대표 훈련시설 보수 및 여건 개선 등으로 훈련지원을 통해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우수선수양성지원사업, 847억 원).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2,799억 원)은 국내 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 체육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335억 원) 등 1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포츠용품의 규격, 운동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품질을 인증하고 서울국제 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개최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 및 스포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354억 원), 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개최뿐만 아니라(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 434억 원), 세계여자하키선수권대회 등 27개 종목의 37개 세계선수권·정책대회(국제체육교류 지원, 95억 원)와 코리아오픈테니스대회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25개의 국제대회의 개최·참가도 지원한다(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 335억 원).

장애인체육 육성 프로그램

장애인체육 육성 프로그램(620억 원)에는 장애인의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적 교류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사업(506억 원)과 장애인 체육단체 운영지원사업(114억 원)이 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으로 장애인올림픽대회 등 국제대회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체육 교실 및 동호회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사업은 시·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거나 장애인 종합 체육시설의 운영 및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량}



OECD 공공데이터 개방보고서 주요 내용

OECD Open Government Data Report

박정수

재정운영지원팀 부연구위원
mymajesty@kpfis.kr

OECD 열린정부 보고서 개요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최근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공공데이터 개방(Open Government Data)에 주목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시민의 공공데이터 접근성, 가용성을 높이고, 데이터의 경제·사회 활동에서의 사용 증진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공공정책 참여를 증진하고 공공부문 효율성, 책임성 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의 활발한 공공데이터 사용은 정부의 증거기반 정책으로 환류되며, 공공부문의 혁신을 촉진한다.

OECD는 회원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9월 공공데이터 개방보고서(Open Government Report)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16~2017년 2년에 걸쳐 조사된 공공데이터 개방서베이(Open Government Survey) 3.0 결과를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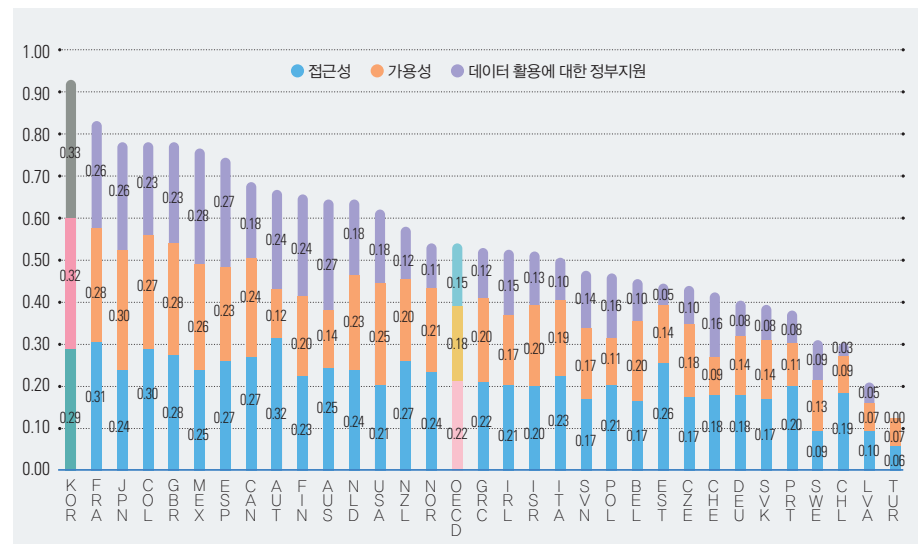
분석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를 산출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예산정보 개방, 개인정보·보안 등 각 분야별로 현황 및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공공데이터 개방서베이는 OECD 35개국 중 32개국과 3개 비회원국 대상으로 진행되었다¹. OECD는 각국 정보화책임관(Chief Information Officer)이 자국의 정보개방 노력과 절차에 대해 평가한 설문지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였고, 각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80개 문항으로 평가하여 공공데이터 개방지수(OUR(Open, Useful, Reusable) Data Index)를 산출했다.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는 데이터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활용에 대한 정부 지원(Government support for Data Reuse) 등 3개 하위지표로 구성된다. 조사 결과 OECD 국가들의 평균은 0.55점(접근성 0.22점, 가용성 0.18점, 정부지원 0.15점)이었다. 총점의 경우 한국이 0.94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프랑스 0.85점, 일본 0.8점, 콜롬비아 0.8점, 영국 0.78점 등의 국가가 상위권이었다. 그리고 독일 0.41점, 스웨덴 0.31점, 칠레 0.31점, 라트비아 0.21점, 터키 0.13점의 국가가 하위권이었다.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국가 순위



자료: OECD, "Open Government Data Report", 2018.

¹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헝가리 등 3개 회원국은 공공데이터 개방정책과 홈페이지가 없어 제외되었다. 비회원국은 콜롬비아, 리투아니아(2018년 가입), 페루이다.

세부적으로 접근성의 경우는 오스트리아 0.32점, 프랑스 0.31점, 가용성은 한국 0.29점, 일본 0.24점,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부지원은 한국 0.33점, 멕시코 0.28점 등의 국가가 상위권이었다.

OECD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의 핵심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각국에서 민간 등의 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데이터 무료 공개, 접근성 향상 노력 등으로 구성되는 기본공개(open by default) 정책에서도 각국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차이가 있었으며, 소수의 국

가만이 데이터 개방의 사회·경제적 영향, 공공부문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공공데이터 개방이 사회적 가치창출로 연결되려면 개방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데이터 활용 증진을 위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체코,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등 비교적 최근에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도입한 나라에서 계획 추진이 다소 더딘 점을 발견했다. 반면 프랑스, 한국, 영국, 미국 등 비교적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을 조기에 수립한 국가들은 데이터 가용성, 접근성, 재사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 및 시행하고 있었다. 계획 추진이 더딘 국가들은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데이터 개방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데이터 개방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이다. 대다수 조사대상 국가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정기적으로 공공부문 정보제공기관과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 협의하는 창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공공데이터 개방포털에서의 수시 데이터 제공과 피드백 등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소수였다. 특히 정보의 활용처, 정보공개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여 데이터의 지속적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시민사회와 공공조직 간의 의사소통, 정보 사용자 권한 강화 등을 통해 각 부문 간 데이터 교환 활성화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OECD 공공데이터 개방보고서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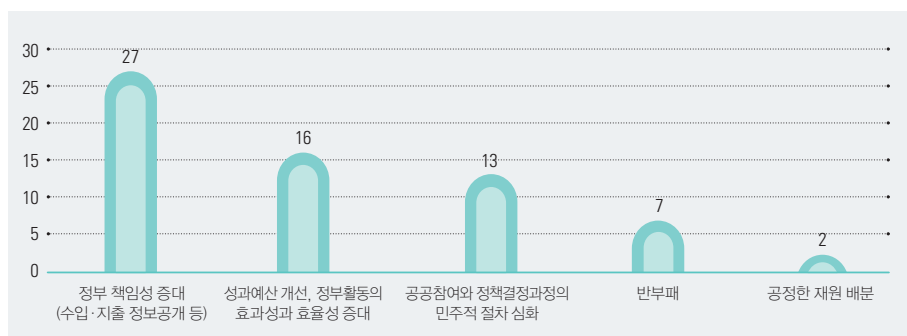
예산정보 공개

예산정보 공개(open budget data)를 확대하기 위해 OECD는 회원국과 IMF, 세계은행, IBP(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GIFT(Global Initiative of Fiscal Transparency Network)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으며, 회원국 대부분이 국제기구의 공공부문 투명성 원칙에 따라 예산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예산정보 공개를 통해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개국이 정부 수입, 지출에 대한 정부 책임성 향상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예산정보 공개로 인한 시민 참여 증대, 경제 혁신 등의 요소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4개국 중 13개국만이 예산정보 공개가 공공 참여 및 민주적 참여를 증진해 준다고 응답했다. 여전히 여러 국가에서 정보개방에 대한 공급자 중심의 접근, 정보 요구에 대한 수동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 개방이 적극적인 공공과의 소통기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개 효과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12개국만이 예산정보가 재정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향상하고 참여를 증진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11개국만이 예산정보 공개가 공공지출과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민의 토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예산정보가 시민사회조직의 데이터 분석, 정책제안에 활용될 것이라고 응답한 국가는 캐나다,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일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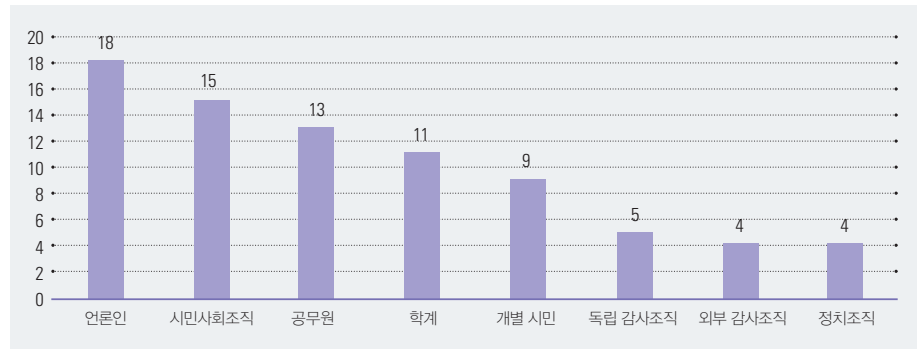
예산정보공개 주요 효과



주: 숫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한 국가의 수를 의미
 자료: OECD, 'Open Government Data Report', 2018.

OECD는 예산정보 공개가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정부는 데이터를 단순히 공개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개된 예산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그래야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이 정부 책임성 제고, 성과 향상과 공공 참여 증진 등의 바람직한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

예산정보의 주요 사용자



주: 숫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한 국가의 수를 의미

자료: OECD, 'Open Government Data Report', 2018.

OECD는 예산정보의 주요 사용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설문 결과 언론인 집단, 시민사회조직이 다수 국가에서 주요 예산정보 사용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인 집단과 시민사회조직은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요한 참여자들이며, 이들에 대한 예산정보 접근성 증대는 정보공개를 통한 참여를 증대시킬 것이다.

예산정보의 활용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공공사업과 투자의 데이터 시각화와 지리정보 활용(geolocation functionalities) 등 사용자 친화적인 쌍방향 도구를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35개국 중 14개국에서 정부 예산정보의 시각화를 제공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사례로 호주,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지출정보 시각화를 소개하였다.

호주는 theOpenBudget.org에서 정부 예산정보에 대한 시각화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출내역 검색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독일의 예산정보 사이트 bundesshaushalt.de는 연방 재무부 사이트와 함께 인포그래픽 및 양방향 시각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는 GC InfoBase에서 지출, 성과 등에 대한 양방향 시각화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국의 예산 및 지출정보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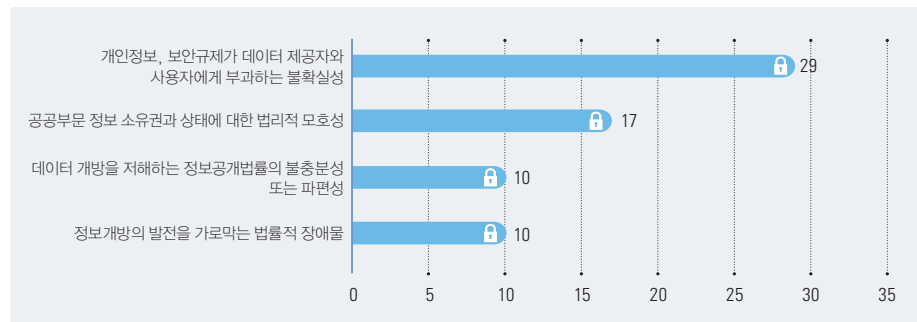
주: 미국 USASpending.gov는 2018년 재단장 후 개통함
자료: 각국 재정정보 공개 홈페이지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안

정보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보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로 공공데이터 개방의 법률적 장애요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 34개국 중 29개국이 개인정보 보호·보안 규제로 인해 제공사, 사용자가 느끼는 불확실성이 장애요인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정보 소유권에 대한 모호성이 장애요인이 된다는 응답도 절반인 17개국이었다.

정보공개와 법률적 장애



주: 숫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한 국가의 수를 의미

자료: OECD, 「Open Government Data Report」, 2018.

각국 정부는 데이터 개방을 촉진하는 법률적 환경 조성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중적 환경에 놓여있다. 정보보호 차원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유 데이





터가 공개되어야 한다면, OECD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개인정보 익명화 또는 비식별조치(anonymisation)가 반드시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는 데이터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공개 이전에 해당 조치를 취함으로써, 잠재적인 개인 입장에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페루, 터키 2개국만이 데이터 개방에 앞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의무와 함께 지침을 함께 배포하여 공공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를 장려하고 있다. 프랑스와 노르웨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고, 영국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외에도 정보 윤리 프레임워크(Data Ethics Framework)를 만들어 관계 공무원에게 배포하였다. 이 외에 멕시코, 콜롬비아 등에서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².

OECD는 공공데이터 개방보고서 전반에서, 정보공개로 인한 투명성 강화, 데이터 재사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정부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보안 등은 오히려 정부 신뢰에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잠재 요인이므로 세심한 관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내력](#)

²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했으며, 2018년 8월 발표한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에서 비식별 조치를 거친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고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과 산업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우토반 건설로
실업문제가 해결됐을까?

재정정책의
쉽지 않은 과제

김동욱

kimdw@hankyung.com

Germany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속도 무제한의 고속도로 '아우토반(Autobahn)'은 오랫동안 독일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해왔다. 아우토반은 엄청난 매력을 지닌 단어였다. 그리고 동시에 나치 히틀러 정권이 어떻게 한때나마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다. '히틀러가 나쁜 짓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는 아우토반을 건설했어'라는 말은 독일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 같은 상징의 생명력은 질졌다. 현대 독일 안팎에서도 '히틀러가 아우토반을 건설해 경제대공황을 극복했다'는 식의 표현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기도 하다. '총통께서 길에다 실업을 물어버렸다'는 나치의 선전 문구는 나치가 패망한 뒤에도 오랫동안 상식처럼 여겨져 왔다. '그때 아우토반을 건설했고, 오늘 우리가 그 위를 달린다(Es sind auch Autobahnen gebaut worden damals, und wir fahren heute drauf)'는 표현은 이 같은 감정이 잘 녹아 있는 문구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독일의 아우토반 건설은 대공황에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사회기반시설(SOC)건설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져 왔다. 유효수요 이론에 근거한 적자재정이라는 케인스의 경제 이론을 원용했던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투자 프로그램에 따른 경기대처라는 케인스식 불황 대처법이 행동으로 옮겨진 케이스로 꼽혀왔던 것이다. 당대에 독일 내외에서 '경제 기적(Wirtschaftswunder)'이라고 불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우토반을 둘러싼 이 같은 이미지들은 대부분 허구의 '신화'에 기초했던 점이 적지 않았다.

우선 아우토반 건설이라는 아이디어부터 히틀러나 나치 정권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나치는 아우토반 건설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그들은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의 책상 서랍 속에 있던 고속도로 건설 구상을 가져다 쓴 것에 불과했다. 독일에서 순수하게 자동차 전용도로로 가장 먼저 구상되고 건설된 것은 1913년 완공돼 1921년 확장된 베를린의 '자동차 교통 및 연습도로(Automobil-Verkehrs- und Übungs-

Straße)'였다. 약칭 '아부스(Avus)'로 불렸던 이 도로는 나치 집권 훨씬 이전부터 현실세계에 존재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최초의 실질적인 자동차 전용도로가 계획되고, 건설되기 시작한 것은 나치 집권 1년 전인 1932년의 일이었다. 주도했던 인물도 나치즘과는 거리가 멀었다. 후일 서독 초대 총리가 되는 콘라드 아데나워 당시 쾰른 시장이 아우토반의 첫 삽을 떴다. 최초의 아우토반은 쾰른과 본을 오가는 20km의 4차선 도로였다. 하지만 1933년 집권한 나치 정권은 이를 자신들의 업적으로 가로채 버렸다. 당초 히틀러는 자동차도로 건설에 큰 관심이 없었다. 나치의 경제 이데올로기였던 고트프리트 페터가 도로의 중요성을 파악해 '제국고속도로의 건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도로건설 작업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히틀러가 낸 아이디어로 포장했다. 나치는 아우토반을 '히틀러 도로(die Straßen Adolf Hitlers)', '총통의 길(Straßen des Führers)'로 부르고, 히틀러가 실업을 없앴다는 선전전을 폈다.

일단 나치의 손아귀에 들어선 아우토반 건설계획은 급물살을 탔다. 상징적으로 히틀러가 첫 삽을 뜨고, 연설을 한 뒤 노동자들이 진군하며 흙을 퍼 나르며 도로 건설에 들어가는 식의 세리머니가 연출됐다. 엔지니어 프리츠 토트를 총책임자로 민주국가였다면 오랜 기간이 소요됐을 대규모 건설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1934년이 되면 독일 전역 22개 지역에서 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됐다. 1932년 말 1933년 초 현재 불과 수 km에 불과했던 아우토반의 총연장은 1935~1936년이 되면서 108km로 대폭 늘어났다. 그리고 1937년에는 1,087km, 1938년에는 3,046km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획됐던 6,900 km 구간 중 3,800km 구간이 완성됐다. 1938년 시점에 나치 지도부는 아우토반의 총 연장을 1만km까지 늘릴 계획을 수립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로 이후 도로 건설이 대부분 지지부진해졌지만 말이다.

나치는 아우토반 건설에 총 65억 라이히스마르크의 재정을 투입했다. 처음에는 도로이용세를 거둬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1936년부터는 차량 보유자들에게 유류세를 올리는 식으로 세원을 넓혔다. 제국철도와 국영은행들이 자금을 대출해주기도 했다. 그렇지만 재원의 60% 가량을 차지했던 것은 나치 정권의 노동관련 기구(Reichsanstalt für Arbeitsvermittlung und Arbeitslosenversicherung)였다.

아우토반이 연결하는 도시로는 나치 이데올로기 확산을 상징하는 도시들이 우선순위에 놓여졌다. 예를 들어 바이에른주에서는 나치의 기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뉘른베르크, 뮌헨, 잘츠부르크 등을 연결하는 구간이 최우선시 됐다. 뮌헨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는 이미 1939년에 완공됐다. 나치 운동의 발상지이자 중심도시, 나치전당대회가 열린 도시들을 연결하는 것은 특별한 이데올로기적 의미가 있었다.

아우토반은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군사적으로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독일의 저명한 현대사학자 볼프강 벤츠에 따르면 1938년 당시 총 연장 3,800km에 불과했던 아우토반의 군사적 유용성은 한계가 있었으며 실제 군대와 군수품의 운송에는 철도가 주로 이용됐다. 또 2차 세계대전 대부분 기간 동안 독일은 석유 부족으로 아우토반에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고, 대부분 기간 동안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히틀러가 1939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다면 사실상 도로 건설보다는 다른 곳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조치였다. 역설적으로 서부 전선에서 히틀러가 만든 아우토반은 연합군의 진군로로 활용되기도 했다.

또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대규모 건설 사업에도 불구하고 아우토반이 독일의 실업문제 해결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13만 명가량의 인력이 아우토반 건설에 참여했지만 1932년 시점에 6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있었던 만큼, 아우토반 건설이 줄인 실업자 규모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933년이 되면 이런저런 히틀러 정권의 정책으로 실업자 규모가 480만 명으로 줄어들고, 1935년이 되면 실업자 규모는 270만 명으로 감소된다. 당시 나치는 실업문제를 해결한 점을 지속적으로 선전하며 ‘평온한 미래

(ruhige Zukunft)’의 도래를 약속했다.

이 같은 실업의 급격한 감소는 희망이 없던 사회를 순식간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회로 바꿨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대공황에서 호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대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히틀러의 12년 집권 기간 중 초기 6년간 당시 치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경제위기와 실업을 빠르게 극복한 모습을 보이면서 당대 독일인들의 지지를 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은 통계상 수치와는 다소 달랐다. 당시 실업문제 해소에 결정적이었던 것은 아우토반 건설이라기보다는 독일의 재무장 조치가 끼친 효과가 컸다. 독일이 본격적인 재무장에 들어선 1938년이 되어서야 군수 분야 고용이 늘면서 독일은 완전고용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실업자 수는 50만 명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나치는 군수를 고용창출로 위장해 군수확대에 신속하게 돌입하면서 대량실업을 빠르게 극복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대공황의 무서움을 경험했던 독일인들이 나치 정권이 부여한 재무장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잘 받아들이면 면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기존에 직업 전선에 나와 있던 여성 노동력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통계적 눈속임도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나치는 경제 회복책의 일환으로 여성을 산업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길을 모색했다.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여성의 역할을 전통적인 ‘3K(자녀(Kinder) 부엌(Kuche) 피아노(Klavier))’로 되돌리려고 시스템적으로 노력했다. 수출증가와 내수증대를 통한 산업발전으로 고용을 늘리는 ‘정공법’ 대신 여성 일자리를 줄여 남성 실업을 해소하는 ‘편법’을 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각종 정책도 마련했다. 대표적인 것이 결혼 후에 일자리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여성 노동자들에게 결혼 용자금을 대출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결혼 여성에게 평균 600마르크 정도 빌려줬다고 하는데, 대공황 여파로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 많아 지자 사회대책의 일환 역할을 하기도 했다.

나치의 의도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929년 59만 7,000건이던 결혼은 1932년에는 51만 6,800건으로 감소했다. 국가가 1933~1934년에 36만 6,000건의 결혼 용자금을 대여해주자 효과가 곧바로 가시화됐다. 혼인건수는 1933년에는 63만 8,000건으로, 1934년에는 74만 200건으로 증가했다. 결혼 용자금 정책은 ‘일타 삼피’ 이상의 효과를 본 것으로 나치는 평가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결혼을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지지층을 포섭할 수 있었고, 성인 남성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려는 주목적도 이뤘다. 덤으로 인구증가도 촉진됐다. 나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 후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 한 명당 대여금을 3분의 1씩 탕감해줬다.

여성을 가정에 묶어두기 위한 다른 정책도 병행됐다. 가내 하인고용에 대한 세금과 보험금을 면제해줘서 가내 일자리를 늘렸는데 이는 여성 노동인력 상당부분을 가정 내에 흡수하는 효과를 봤다. 고용정책도 남성 노동자를 주로 쓰는 산업분야에 집중했다. 결론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여성 노동자수는 크게 줄어서 1936년에는 1,770만 명의 피고용자 중 여성은 550만 명에 불과했다. 이는 1920년대 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이었다.

여성 고용을 줄이는 것 외에도 고용 증대를 위한 각종 ‘편법’이 동원됐다. 눈에 보이는 통계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계의 사용을 가능한 억제하기도 했다. 1933~1934년 건설과 관개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이뤄져야 했다. 생산성 문제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1933년 7월에는 연초업계에 새로운 기계 주문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기존 기계를 폐기할 경우 조세상의 특혜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눈에 보이는 실업은 크게 줄었지만 내실은 통계만큼 화려하지 않았다. 1935년 육류, 돈육 수지, 치즈, 계란 등 기초식품의 1인당 평균 소비는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이와 함께 육류의 대체품인 생선을 제외하면 1936년에는 모든 식품의 1인당 소비는 1929년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1934년 중반까지 새로 취업했다는 350만 명 중 40만 명가량은 농촌 활동으로 용돈 정도 타는 수준의 청년들이었고 60만 명은 실업보조금에 불과한 액수를 임금으로 받으며 건설이나 관개 같은 중노동에 투입된 취로사업 노동자에 불과했다. 재정투입과 대규모 사회사업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은 그 첫 사례 때부터 구상만큼 실재에 있어서 해결하기 쉬운 과제는 아니었던 셈이다. ▶▶▶

참고 문헌

- Wolfgang Benz. (1990). 『Herrschaft und Gesellschaft im nationalsozialistischen Staat』. Fischer.
- Norbert Frei. (2007). 『Der Führerstaat: Nationalsozialistische Herrschaft 1933 bis 1945』. dtv.
- Charles S. Maier. (1987). 『In Search of Stability-Explorations in Historical Political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bastian Haffner. (2017). 『Anmerkungen zu Hitler』. Fischer.
- Wolfgang Benz, Hans Buchheim, Hans Mommsen (Hg.). (1995). 『Die Nationalsozialismus-Studien zur Ideologie und Herrschaft』. Fischer.
- 티모시 메이슨. (2000). 『나치스 민족공동체와 노동계급』. 김학이 옮김. 한울아카데미.
- 로버트 O. 팩스턴. (2005). 『파시즘-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 최희영 옮김. 교양인.
- 독일 디벨트. 『Der unzerrüttbare deutsche Mythos Autobahn』. 2012년 3월 2일자. (<https://www.welt.de/kultur/history/article13899225/Der-unzerruetbare-deutsche-Mythos-Autobahn.html>)
-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K P F I S N E W S

2018년 하반기 개도국 재정공무원 FMIS 초청연수



한국재정정보원은 미주개발은행(IDB)과 함께 2018년 11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중남미 8개국(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공화국, 도미니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파라과이, 페루) 재무부 고위 공무원

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개도국 재정공무원 FMIS 초청연수를 진행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연수 참가국 대표단들에게 한국의 재정개혁 및 디브리인 구축·운영 경험을 강의하는 등 심도 있는 재정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었다. 또한 참가국 간 재정혁신 및 재정정보시스템 현황 및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솔루션을 논의하는 등 양방향 연수로서의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본 연수는 미주개발은행(IDB)과 한국 재정정보시스템 관련 경험을 참가국에 전파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단계부터 긴밀한 협조 아래 진행되었으며, 한국 재정정보원은 참가국 간 재정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앞으로 참가국의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8년 제2차 dBrain 사용자협의체 간담회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은 2018년 10월 25일(목) dBrain시스템의 수입, 지출, 조달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17개 부처, 20여 명의 사용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간담회에서

서 논의되었던 개선사항에 대한 진행사항 공유와 사용자협의체의 발전 방향, 업무시스템의 운영 개선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올해 도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사용자협의체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남관재**

월간

나라 재정

NOVEMBER
2018 Vol. 23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한국재정정보원장)
편집위원장	박용주(재정정보연구본부장)
편집위원	장정진(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장) 최성진(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사무관) 연훈수(재정정보연구본부 연구위원) 심혜인(재정정보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오병욱(경영지원본부 차장) 이현석(dBrain운영본부 차장) 박종필(사이버안전센터 차장) 김철수(e나라도움운영단 차장)
편집간사	김도일(재정정보연구본부 연구원)
디자인·제작	(주)에스아이케이알 02-549-5298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NOVEMBER
2018 Vol. 23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908-8200 Fax. 02-6312-8959 www.kptis.or.kr



9 772506 897000

ISSN 2508-8971